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Analysis of the Budget Proposals of
Public Institutions by committee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Ⅱ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I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오지은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행정실무원
심의영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Ⅱ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2023년도 보조, 출자, 출연 등 정부 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건·복지·고용, 교육, R&D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4조원(5.2%)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은 112.4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은 2019년 15.8%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등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수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350개 공공기관 전체의 정부지원 예산안을 개관하고 공공기관 예산안의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예산안, 16개 전문기관의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현황 등 시의성이 높은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산출 근거의 정확성 제고, 사업계획 미흡, 사업 성과분석 필요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안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공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등 ... 5
 - 1-1.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5
 - 1-2.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사업 관리 철저 필요 9
2.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의 전제 조건인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조속한 마련 필요 14
3.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 프로그램 유형 다변화 모색 필요 ... 19
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과다 산정된 입장료수입 조정 검토 필요 24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 사업 성격의 유사점을 고려한 통합 · 조정 필요 39
2.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 45
3. 재고자산매각대(농산물 및 종자 판매 수입) 과거 수납 규모를 반영한 적정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48
4.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미반영 53



CONTENTS

[해양수산부]

1.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목적 달성을 고려한 적정 이익금 활용방안 마련 고려 필요 ... 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71
2.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타경상이전수입 적정 계획안 규모 편성 필요 76
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이차보전금 예산안 규모 감액 검토 필요 ... 79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 사업 관련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89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관리 철저 필요 96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 마련 검토 필요 ... 107
2. 환경부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114
3.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용자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124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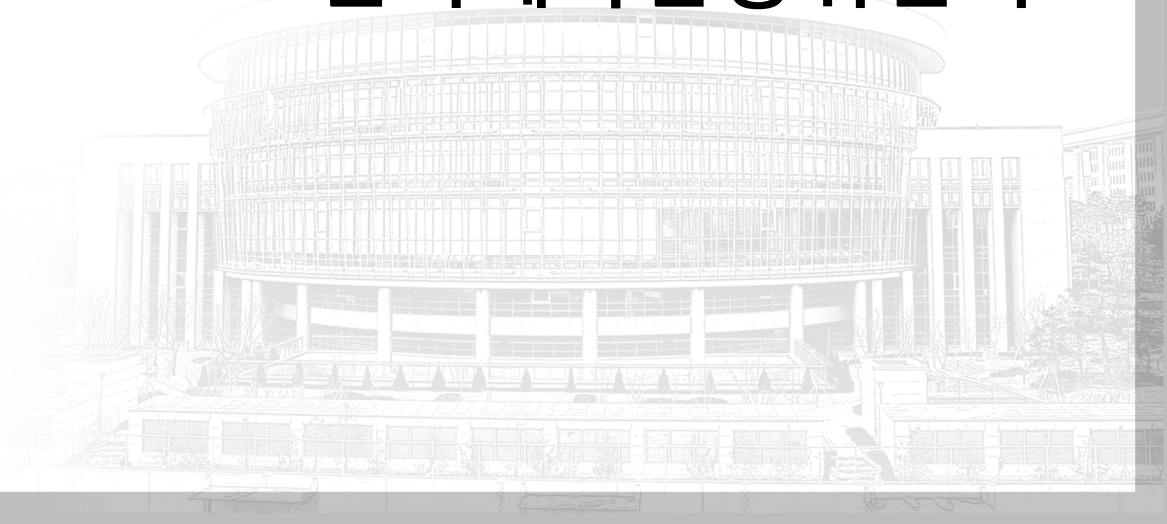
1.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예산 보증료 수입의 적정한 추계를 통한 편성 필요 133
2. 울산병원 신축 사업, 공사 지연 일정을 감안한 예산안 감액 필요 137
3.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 공동훈련센터의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투자 비율 확대 필요 141
4.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공사 지연 일정을 감안한 공사비 예산 조정 필요 148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5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충전소구축 사업의 예상 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161
2. 국가철도공단 일반철도건설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67
 - 2-1.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공구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167
 - 2-2.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73
 - 2-3.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검토 필요 ... 178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이관 필요 ... 182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PIS펀드 투자실적 제고 필요 18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1.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기반조성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남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에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²⁾, 민간자본 등 총 1조 1,809억원을 투입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은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도 관련 예산안으로 2022년 예산(33억원)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33,255	50,446	50,446	52,158	1,712	3.4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700	3,300	3,300	3,150	△150	△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61-301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사업개요]

구분	내용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면적	5,073,425m ² (육지 4,107,846m ² , 매립예정 140,082m ² , 해수면 825,497m ²)
개발기간	1994년 ~
투자계획	1조 1,809억원 (정부 1,058억원, 한국관광공사 2,445억원, 민간자본 8,306억원)
사업시행자	한국관광공사
주요시설 계획	공공시설: 관광센터, 지원시설, 주차장, 도로, 광장 숙박시설: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펜션단지 등 상가시설: 복합상가, 레스토랑, 아울렛 쇼핑센터 등 운동오락시설: 마리나(300척), 골프장(27홀), 해수타운 등 휴양문화시설: 테마정원, 아티스트빌리지, 남도문화컴플렉스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의 설계 지연 등에 따른 2023년도 공사비 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3,150백만원)은 관광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사업(1단계)에 대한 2차년도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공사)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86억원의 2단계로 계획된 사업으로, 일 1,5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차로 건설(1단계)하고, 2025년 이후에 일 3,3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2단계)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대부분의 기반시설(진입도로, 상수도, 전기, 단지조성)은 2009년도에 완공되었으나,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유치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³⁾, 하수처리장 미설치 등이 민간투자유치의 장애요인 중 한가지로 꼽힘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3)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총 5,073.4천m²의 용지를 조성하였는데, 2022년 현재 분양용지 1948.4천m² 중 834.8천m²는 2003년 골프장으로 매각되었고, 숙박, 상가 등 39개 시설(분양용지의 57.2%)은 미매각 상태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內
사업기간	1단계: 2021년 ~ 2023년(1,500톤/일 하수처리시설 공사) 2단계: 2025년 이후(3,300톤/일 하수처리시설 공사)
시행주체	해남군
처리구역	2.644km ²
총사업비	386억원(원인자부담금 316억원(국비 158억원, 지방비 158억원), 환경부 70억원) - 1단계: 213억원(국비: 71.5억원, 지방비: 71.5억원, 환경부 70억원) - 2단계: 173억원(예정)
사업시행자	한국관광공사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관광공사는 하수처리장 1단계 건립사업에 대하여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에 걸쳐 공사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설계 도중 해양배수관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이 발견됨에 따라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설계는 계획 대비 1년 늦은 2023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가능성이 있어 실제 착공은 더욱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⁴⁾

[오시아노 관광단지 분양실적]

(단위: 천m²)

구분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지원시설	녹지	운동오락시설	합계
전체 조성면적(A+B)	348.5	145.8	526.5	517.4	1,746.3	1,788.9	5,073.4
자체사용(B)	-	-	255.0	512.5	1,746.3	611.1	3,125.0
분양용(A)	348.5	145.8	271.5	4.9	-	1,177.8	1,948.4
분양실적	-	-	-	-	-	834.8	834.8
미분양	348.5	145.8	271.5	4.9	-	343	1,113.6

자료: 한국관광공사

4)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는 해남군과 협의하여 2023년 5월에 해양배수관로를 제외한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제 추진 상황]

구분	추진 계획	실제 추진 상황	비고
기본 및 실시 설계	2021년 3분기 ~ 2022년 1분기	2021. 12. ~ 2023. 12	해양배수관로 추가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설계기간 연장
공사(토목, 건축, 전기 등) 및 감리	2022년 1분기 ~ 2023년 4분기	2023. 5 ~ 2025년(예정)	2023년 5월 해양배수관로를 제외한 하수처리장 공사 착공 예정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1차년도 공사비 33억은 2022년 9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 일부는 2023년에도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차년도 공사비 31억 5,000만원을 계획대로 편성하였는데, 2022년 1차년도 공사비 일부도 2023년에도 집행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2차년도 공사비(2023년도 예산안) 또한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에 따르면 계속사업 공사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

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6~257

6)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할 계획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조정 없이 정부안에 따라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기반조성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민간투자가 부진한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08억 9,900만원이며 한국관광공사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관련 예산으로 2022년 대비 41억 4,400만원 감액된 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33,255	50,446	50,446	52,158	1,712	3.4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12	10,822	10,822	6,678	△4,144	△3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8 ~ 2023년 (당초 2018. 10. ~ 2021. 9.)
총사업비	40,899백만원 (국비 30,874백만원 / 한국관광공사 10,025백만원)
용도/규모	120실 내외 관광숙박시설 등(건축연면적 9,473㎡ 이내)
시설	객실(120실 내외), 인피니티풀, 세미나실, 연회장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61-301

나. 분석의견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인허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점, 동절기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증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으로 공사비, 감리비 부대경비 등 총 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
산출내역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6,678백만원 - 시설공사비: 6,417백만원 - 감리비: 255백만원 - 부대경비: 6백만원

자료: 한국관광공사

최근 4년간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8년 0%, 2019년 5.5%, 2020년 6.4%, 2021년 10.5%, 2022년 7월 말 기준 18.1%로, 매년 집행부진에 따라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계획		교부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8	1,600	1,600	1,600	0	1,600	0	0	1,600	0
2019	1,000	1,000	1,000	1,600	2,600	144	5.5	2,456	0
2020	8,400	6,600	6,600	2,456	9,056	577	6.4	7,215	1,264
2021	5,438	5,438	5,438	7,215	12,653	1,328	10.5	11,325	0
2022.7	10,822	10,822	10,822	11,325	22,147	4,021	18.1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설계공모 지연, 설계 중단,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협의 기간 지연 등에 있다.

2018년부터 추진되었어야 할 건축설계는 2019년 8월 공모 절차에 들어가 1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설계 용역기간은 2019.12.31.부터 2020.12.30.까지 1년간이었다.

그런데 설계 도중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필요성 제기, 해안선 이격거리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20. 8. 5.부터 2021. 2. 8.까지 약 6개월 간 설계가 중단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에 들어서야 건축설계 및 각종 인·허가 문제를 완료하고 2022년 4월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추진 경과]

연도	예산현액	집행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
2018	16억원 (실시설계비 등)	-	-
2019	26억원 (실시설계비 등)	1억 4,400만원 (설계공모비)	2019. 8. 건축설계공모 2019. 12. 건축설계 용역 계약 (계약기간 2019. 12. 31. ~ 2020. 12. 30.)
2020	90억 5,600만원 (공사비 등)	5억 7,700만원 (건축설계용역 선급금 등)	2020. 8. 5. ~ 2021. 2. 8. 건축설계 중지(약 6개월)
2021	126억 5,300만원 (공사비 등)	13억 2,800만원	2021. 2. ~ 12 건축설계(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 포함)
2022.7	221억 4,700만원 (공사비 등)	40억 2,100만원	2022. 4 건축공사 착공 ※ 2022년 예상 집행액: 136억 2,600만원
2023	151억 9,900만원	151억 9,900만원	사업완료 및 예산 전액 집행 예정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2년에 편성된 예산현액 221억 4,700만원 중 85억 2,100만원(예산 현액 대비 38.5%)은 2023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속도를 높여 2023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월 예정 예산 85억 2,100만원과 2023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66억 7,800만원을 2023년도에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사업 최초 계획 및 추진현황 등]

구분	최초계획	변경계획(3부지)	실제 추진현황 및 계획
건축설계 현상공모	2018. 12 - 2019. 02	2019.08 - 2019.12	2019.08 - 2019.12
건축설계 (인허가 포함)	2019. 03 - 2019. 12	2019.12 - 2021.8	2019.12 - 2021.12
시공·책임감리업체 선정	2020. 01 - 2020. 02	2021.09 - 2021.11	2021.11 - 2022.01
건축공사	2020. 03 - 2021. 08 (17개월)	2021.12 - 2023.08 (20개월)	2022.01 - 2023.07 (18개월)
오픈	2021. 09 -	2023. 09 -	2023. 09 -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런데 2022년 8월 기준 공정률이 8.53%에 불과하고 겨울철에는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하여 통상 공사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촉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발주청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동 공사기간을 계산할 경우 31개월로 계산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

2)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은 평균적인 공사기간으로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를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사기간을 평균보다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사업 공사 기간]

구분	산정공식(기타 건축물)	변수정의	적용범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Y = -68.550 + 18.192 \times B + 12.079 \times G - 5.25 \times \ln(A) + 167.332 \times \ln(C)$	Y=공사기간(일) C=총공사비(억원) A=연면적(100m ²) G=지상층수(층) B=지하층수(층)	10억원 이상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사업 적용	$950\text{일}(31\text{개월}) = -68.550 + 18.192 \times (1\text{층}) + 12.079 \times (5\text{층}) - 5.25 \times \ln(94^*) + 167.332 \times \ln(316^{**})$ $^*94=9,472.99\text{m}^2$, $^{**}316=316.08\text{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8월 기준 공정률이 8.53%에 불과한 점, 동절기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의 전제 조건인 청와대 자체 운영계획의 조속한 마련 필요

가. 현 황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은 현행 청와대 사랑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사업¹⁾의 내내역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으로 7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30,386	24,675	25,455	44,564	19,889	80.6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	-	-	7,000	7,000	순증

자료: 한국관광공사

동 사업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현재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함으로써, 청와대 권역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청와대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²⁾가 보조사업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2023년 1분기에 청와대 및 청와대 사랑채 방문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등을 통해 개편기획안을 수립하고, 1~2분기에 개편기획안에 따른 설계를 실시하며, 2~3분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6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청와대 권역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으로 청와대 및 인근 권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기반 제고																
추진기간	2023. 1. ~ 12.(단년도 사업)																
소요예산	7,000백만원(인프라 개편공사 7,000백만원)																
세부실행 계획																	
	<table><tr><th>재구성 기획</th></tr><tr><td>1분기</td></tr><tr><td>· 청와대 및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 대상 의견조사 등 관광편의 시설 수요분석</td></tr><tr><td>· 개편기획안 수립</td></tr></table>	재구성 기획	1분기	· 청와대 및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 대상 의견조사 등 관광편의 시설 수요분석	· 개편기획안 수립	}	<table><tr><th>설계 및 안전계획</th></tr><tr><td>1~2분기</td></tr><tr><td>· 개편안에 따른 설계 추진</td></tr><tr><td>·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td></tr></table>	설계 및 안전계획	1~2분기	· 개편안에 따른 설계 추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	<table><tr><th>시 공</th></tr><tr><td>2~3분기</td></tr><tr><td>· 개편공사 발주 및 시공</td></tr><tr><td>· 별관 일부공간은 분리 공사 시행</td></tr></table>	시 공	2~3분기	· 개편공사 발주 및 시공	· 별관 일부공간은 분리 공사 시행
	재구성 기획																
1분기																	
· 청와대 및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 대상 의견조사 등 관광편의 시설 수요분석																	
· 개편기획안 수립																	
설계 및 안전계획																	
1~2분기																	
· 개편안에 따른 설계 추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시 공																	
2~3분기																	
· 개편공사 발주 및 시공																	
· 별관 일부공간은 분리 공사 시행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
산출내역	시설 인프라 개편공사: 7,000백만원 ○ 인프라공사: 5,120백만원 - 리모델링(지상 2층, 지하 중층) 시공: 4,800백만원 (시공 대상면적 약 3,000m²×160만원) - 구조보강 및 보강부분 내부마감: 320백만원 (1층면적 1,462m²×22.2만원) ○ 종합관광홍보 안내센터 및 전시관 조성: 280백만원 - 방문객 휴게용 가구 구매 등: 200백만원 - 편의시설 확대(전동휠체어, 물품보관함 등): 80백만원 ○ 기획·설계·감리: 1,600백만원

자료: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의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등은 청와대 자체운영 계획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을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청와대 관련 콘텐츠 등에 대한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관광안내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

활용방안
1. 안내체계 구축 ○ 청와대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 서비스 제공, 편리한 이용환경 마련 - (편의제공) 안내기능 강화(다국어 안내인력 증원, 해설운영), 편의시설 확대(전동휠체어, 물품보관소, 수유실 등), 휴식 공간 마련 등 - (관광정보 제공) 청와대 관련 정보(역사, 스토리 등) 및 인근 권역 관광정보 제공 2.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 청와대 및 인근 권역을 연계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 프로그램 운영 - (청와대 경내) 유무형 자원 활용, 체험 · 관람형 콘텐츠 개발 - (인근 권역) 점(청와대)→면(인근 권역)으로 관광 범위 확장, 인근 문화 · 역사자원을 연계한 테마 · 주야간별 관광프로그램 운영 3. 홍보마케팅 ○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내국인, 외래관광객의 청와대 방문 유도 - (방향) 기존 사랑채 웹페이지 활용, 인근 권역 연계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이벤트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 (교통편의 증진)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등 관광 편의 향상 - (홍보물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및 영상광고 등 제작 - (방한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방한 외래관광객 대상 청와대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자료: 한국관광공사

다만,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산출된 2023년도 예산(안) 7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현 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추정된 예산이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기간, 소요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청와대가 개방됨에 따라 현재 청와대의 관리는 문화재청이 임시로 맡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은 청와대의 시설조경관리, 홈페이지 관리, 환경개선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청와대 사랑채 개편 및 운영 등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맡을 계획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부처 간 담당 업무 및 내용 등이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청와대 사업 관련 예산(안)]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21,762백만원 -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7,479백만원 - 현장인력 및 경사관리: 2,703백만원 - 시설장비 및 전산시스템 관리: 4,116백만원 - 조경관리: 660백만원 - 청와대 개방운영: 12,312백만원 - 청와대 입장 및 홈페이지 등 관리운영: 9,962백만원 - 관람만족도 제고: 2,350백만원 - 관람환경 개선: 1,621백만원 - 화장실 설치 및 보수사업 등: 1,251백만원 - 기타 관람편의시설 확충: 370백만원 - 역사문화공간 조성: 350백만원 - 경복궁 후원권역 종합정비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350백만원	■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 : 7,000백만원 - 시설 인프라 개편공사: 7,000백만원 - 인프라공사(사랑채 리모델링 등): 5,120백만원 - 기획·설계·감리: 1,600백만원 - 종합관광홍보 안내센터 및 전시관 조성: 280백만원

자료: 문화재청 및 한국관광공사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에 따라 청와대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공간성격,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에 따른 후속절차로 수립되는 계획인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과 이에 대한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수립이 지연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의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한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동 사업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을 국회 심의기간 동안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사업은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사업¹⁾의 내내역사업으로, 청소년 참여형 독서캠프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²⁾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3억원) 대비 2억원(66.7%)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6,609	6,203	6,203	5,985	△218	△4.8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493	300	300	500	200	6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사업은 진흥원이 캠프 운영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사업자가 독서문화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동 사업의 캠프 운영 사업자를 현재 15개(2022년)에서 25개로 확대하고자 2022년 예산 대비 66.7%를 증액 편성하였다.

동 사업 캠프 운영 사업자의 모집 과정을 살펴보면, 캠프 운영 사업자가 연 2회 운영할 운영계획 프로그램을 4개 유형³⁾ 중 선택(동일유형 2회 선택 가능)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면, 진흥원이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1433-308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3) 유형A(진로탐색), 유형B(창작과 비평), 유형C(독립출판물 발간), 유형D(주제 탐색형)

진흥원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고르게 선정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권역에 적합한 사업자가 부족할 경우 타 권역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1년까지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계획 제출 시, 동 사업의 운영프로그램을 필수유형 1개(독립출판물 발간)와 자유프로그램 1개(청소년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부터 운영프로그램의 유형을 4개 유형 중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목적	- 책을 매개로 한 독서 기반의 청소년 참여형 독서캠프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캠프 운영
3. 운영방법	- 독서캠프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각 캠프별로 4개 유형 프로그램* 중 연 2회 운영 (동일유형 중복 운영 가능)
*4개 유형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유형 A (진로탐색)	- 목적: 출판/독서 문화산업 관련 청소년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개념: 직무별 전문가 만남 및 업무 체험, 문화산업시설/기업 탐방 프로그램
유형 B (창작과 비평)	- 목적: 다양한 출판 콘텐츠를 전문가 지도와 동료 비평을 통해 창작해보는 과정 중심 프로그램 - 개념: 청소년이 창작자가 되어 소설, 에세이, 시, 시나리오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를 동료들과 감상하며 발전적인 상호 비평 진행

사업 개요	
구분	프로그램 내용
유형 C (독립출판물 발간)	- 목적: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출판독서문화산업에 대한 공감과 사고 확장 - 개념: 청소년이 되어 출판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1권의 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
유형 D (주제탐색형)	- 목적: 사회적 주제를 책을 통해 읽어보고 탐구, 체험해보는 문화예술경험 제공 - 개념: 청소년 삶에 기반을 둔 자유 주제형 독서 프로그램(주제를 탐구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책을 통해 질문과 답을 찾고 사유가 가능하도록 구성)

4. 사업자 선정

-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로 나누어 고르게 선정. 단,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권역에 적합한 사업자가 부족할 경우 타 권역에 있는 사업자 선정

5.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500백만원 = 25개 캠프 × 2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나. 분석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재 운영 중인 운영 프로그램의 유형이 지역별·유형별로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유형별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별·유형별로 불균형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권역	캠프운영소재	프로그램 유형		수료인원		지급 보조금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¹⁾	
수도권 (4개)	서울 마포구	A	C	30	30	18
	서울 양천구	D	D	30	30	18
	서울 동작구	C	B	35	30	18
	경기 고양시	A+C	A+C	27	32	18
강원권 (2개)	강원 원주시	D	D	30	30	18
	강원 원주시	D	A	10	15	18
충청권 (3개)	충북 청주시	D	D	40	24	18
	충남 홍성군	A+D	D	125	114	18
	대전 유성구	D	D	60	60	18
전라권 (2개)	전남 나주	D	D	30	33	18
	전남 보성	C	C	20	40	18
경상권 (4개)	경남 창원	C	C	30	50	18
	경북 포항	B	B	30	30	18
	대구 동구	C	D	30	40	18
	대구 중구	D	D	30	30	18

주1: 2회차 교육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참가인원을 기재

※ 유형A: 진로탐색, 유형B: 창작과 비평, 유형C: 독립출판물 발간, 유형D: 주제탐색형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체 운영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총 33회⁴⁾의 프로그램 중 C유형과 D유형이 25회에 달하는 등 전체 프로그램 횟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4) 경기 고양시(A+C), 충남 홍성군(A+D)의 경우 중복하여 계상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유형				
	A (비중)	B (비중)	C (비중)	D (비중)	합계 (비중)
운영 프로그램	5 (15%)	3 (9%)	9 (27%)	16 (48%)	33 (10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강원권 및 충청권은 유형 B와 C가 전혀 없고, 전라권은 유형 A와 B가 없으며, 경상권 또한 유형 A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연 2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동일한 유형으로 운영하는 보조사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15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가 1회차 및 2회차에 동일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프로그램 선택의 제약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권이나 충청권에 사는 학생의 경우 B 또는 C 유형의 프로그램은 수강을 희망하여도 사실상 수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흥원은 2023년도 동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시 1회차 및 2회차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운영하게 권장하는 등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입장료수입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²⁾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소유 중인 골프장(뉴서울CC) 및 공연, 전시시설에서 발생하는 입장료수입이며,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6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³⁾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주체이며, 입장료수입은 동법 제17조제1항⁴⁾에 근거한 것이다.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입장료수입	2,593	6,244	6,244	6,244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64 - 641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료수입은 뉴서울골프장의 포괄손익 및 자금조성액 감액 결정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2023년 입장료수입 계획안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입장료수입 2023년 예산안은 62억 4,400만원인데,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뉴서울골프장의 입장료수입 60억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2억원, 아르코예술기술원 2천 5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 수입의 2023년 계획안 중 96.1%를 차지하는 뉴서울골프장 입장료수입 60억원은 한국문화진흥(주)(뉴서울골프장)의 당기순이익을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안 금액	비중	산출근거
뉴서울골프장	6,000	(96.1)	자회사 한국문화예술(주) (뉴서울골프장) 추정 당기순이익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200	(3.2)	대관공연 티켓판매 수수료 875천원 × 160건 + 기획공연 티켓판매액 15,000천원 × 4건
아르코예술기록원	25	(0.4)	예술강좌 운영 15회 × 15천원 × 100명 + 예술기록원 연간회원 가입 20천원 × 125명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9	(0.1)	교육과정 40개 × 평균 수강료 225천원
아르코미술관 등	5	(0.1)	전시 출판물(도록 등) 수익금 20천원 × 250건
예술가의집	5	(0.1)	예술나무라운지 무인 음료기기, 주차장 운영수익 417천원 × 12월
합계	6,244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 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 3개년(2019~2021년) 간 뉴서울골프장 등 관련 시설 입장료수입 수납액 및

수납율을 살펴보았다. 2019~2021년 연도별 예산은 62억 4,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각 상세내역 역시 뉴서울골프장 60억원,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2억원, 아르고예술 기록원 2천5백만원 등으로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2019~2021년 계획안의 산출근거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산출근거와 동일하다.

한편 연도별 계획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9년 87.3%, 2020년 83.7, 2021년 4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2021년의 저조한 수납률은 뉴서울골프장의 입장료수입 수납율(41.7%)에 기인한다. 2022년 역시 뉴서울골프장의 입장료수입 계획은 60억원이었으나 이보다 35억원 적은 25억원이 수납된 바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 계획 대비 수납현황(2019~2022.9)]

(단위: 백만원, %)

구분		뉴서울 골프장	아르고·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고 예술 기록원	아르고 예술인력 개발원	아르고 미술관 등	예술가의 집	합계
'19	계획(A)	6,000	200	25	9	5	5	6,244
	수납액(B)	5,300	89	27	23	2	7	5,448
	수납율(B/A)	88.3	44.3	108.5	257.3	34.2	142.6	87.2
'20	계획(A)	6,000	200	25	9	5	5	6,244
	수납액(B)	5,143	43	11	26	1	2	5,227
	수납율(B/A)	85.7	21.6	45.8	293.4	10.3	47.5	83.7
'21	계획(A)	6,000	200	25	9	5	5	6,244
	수납액(B)	2,500	42	9	40	0	1	2,593
	수납율(B/A)	41.7	21.2	34.6	444.5	8.2	28.1	41.5
'22.9	계획(A)	6,000	200	25	9	5	5	6,244
	수납액(B)	0	37	0	29	0	1	67
	수납율(B/A)	0.0	18.4	0.0	319.5	5.8	15.4	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뉴서울골프장의 수납율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7~2021년 뉴서울골프장의 총포괄손익, 입장료수입 계획안 및 실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2017~2022년 동안 뉴서울골프장의 총포괄손익은 40~76억원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입장료수입 계획안은 60억원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뉴서울골프장의 총포괄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장료수입 계획안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장료수입 수납률은 2017~2021년 동안 75%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1년 60억원 계획안 중 25억원이 수납되면서 수납률이 41.7%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2023년의 뉴서울골프장 입장료수입 수납액 감소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60억원의 계획안을 편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뉴서울골프장 손익 및 기금전입 현황(2017~2022.9)]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총포괄손익	4,072	7,613	4,175	5,359	5,676	미정
입장료수입 계획안(A)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입장료수입 수납(B)	5,000	4,600	5,300	5,180	2,500	2,500
수납률(B/A)	83.3	76.7	88.3	86.3	41.7	4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뉴서울골프장(한국문화진흥(주))은 2020년 개최된 이사회에서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21~2023년 3개년 간 기금조성 목표를 축소하고 확보된 수입금을 한국문화진흥(주)의 자본 적립에 충당’하겠다는 2021년 사업계획⁵⁾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21~2023년 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입장료수입으로 수납하는 금액)을 25억원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안건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용⁶⁾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2020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뉴서울골프장 입장료수입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2023년 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

5) 한국문화진흥(주) 제303차 이사회 의사록 참고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제303차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한 기관 의사결정’, 2020.12.22

[뉴서울골프장 입장료수입 감액 관련 문서]

구분	상세내역
제303차 한국문화진흥(주) 이사회 의사록	1. 건명: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상정내용 개요 · 내장객 및 기금조성 목표 - 내장객: 170,000명(전년대비 동) - 기금조성액: 25억원(전년대비 △18억원 감) · 2021년 재정운영 규모 - 수입 및 지출예산: 31,489백만원(전년대비 감)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대비 투자시설비(자본예산) 감액 편성)
‘한국문화진흥(주) 제303차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한 기관 의사결정’ (2020.12.22.)	2. 한국문화진흥(주)의 제303차 이사회 안건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관 의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 부의안건 검토 및 기관 의사 1)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검토 의견 ○골프연습장 건립 재원 마련(3개년 적립 계획)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를 축소하고 확보된 수익금을 자본 적립에 충당 ○실무 협의내용 대비, 노후화된 전동카트 전수 교체(10대⇒40대)를 위하여 추가 요구된 4.7억원 증액 소요 수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입장료수입 중 뉴서울골프장 수입분은 ① 뉴서울골프장의 총포괄손익과 ② 시설재투자에 따른 기금 조성 감액 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2023년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동 수입의 과대 계상은 연례적으로 이어져 온 측면이 있는데, 이는 기금 수입의 수납률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과도한 지출예산의 편성, 여유자금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입장료수입 산출 시 각 기관별 수납 가능여부(시설재투자 및 포괄손익 발생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기금 조성액을 감액하여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숙고하여 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¹⁾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²⁾에 근거하여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 원금 회수로 발생한 수익금이며,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3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23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405	4,640	4,640	17,888	13,248	285.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특별융자(한시적), 전세자금(창작공간 포함)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75-754

2)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023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상세내역]

구분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특별용자	전 · 월세주택자금
지원한도	(최대) 7백만원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최대) 5백만원 - 긴급 생활자금	(최대) 7백만원	최고 1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용자금리	2.0%	1.2%	1.7%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최장 8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계획안의 산출 시 용자 연장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3년 용자원금회수액이 과대 추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계산하여 수입계획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의 2023년 계획안 178억 8,800만 원은 2023년³⁾ 만기가 도래하는 용자금에 조기상환 추정액 등을 더하여 산출되었으며, 2022년 12월~2023년 11월까지 만기도래가 도래하는 용자금 172억 1,800만 원 및 조기상환(만기 도래 전 상환) 추정액 6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계획안 산출근거]

용자원금회수액
17,888백만원 = ① 만기도래에 따른 정기회수액: '22년 12월 회수액 634백만원 + ② '23년 1~11월 회수액 16,584백만원 + ③ 조기상환액 및 특수채권 회수액 67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용자회수액은 2022.1~11월까지 회수액을 기금으로 반납받고 수입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2023년 계획안에는 2022.12~2023.11 회수액이 수입으로 반영된다.

이 중 2022년 12월~2023년 11월까지의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회수액(172억 1,800만원)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52억원, 코로나19 특별융자 26억원, 전세자금 93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월별 만기도래액(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전 · 월세주택자금	월별합계
'22.12	411.5	222.7	-	634.2
'23.01	402.9	211.8	-	614.7
'23.02	403.6	212.0	-	615.6
'23.03	415.6	214.3	-	629.9
'23.04	423.6	215.0	430.0	1,068.6
'23.05	437.5	213.0	2,962.1	3,612.5
'23.06	451.0	217.3	1,706.5	2,374.8
'23.07	459.3	223.3	0.0	682.6
'23.08	455.4	231.7	0.0	687.2
'23.09	456.6	239.4	546.0	1,241.9
'23.10	447.3	245.2	1,767.0	2,459.5
'23.11	436.5	248.7	1,911.5	2,596.8
합계	5,200.8	2,694.4	9,323.1	17,21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019~2022년 6월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만기도래하는 융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의 2019~2022년 대출분(1년 거치 후 상환도래), 코로나19 특별융자 2020~2021년 대출분(2년 거치 후 상환도래), 전 · 월세주택자금 2019~2021년 대출분(2년 만기 후 일시상환)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중 전 · 월세주택자금의 경우 만기 8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원금회수액 추정 시 동 자금의 만기연장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2022.6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대출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특별용자		전·월세주택자금		합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9년	1,440	3,976	-	-	57	3,647	1,497	7,623
2020년	2,331	5,681	1,090	7,125	65	5,080	3,486	17,886
2021년	1,836	7,197	459	2,940	123	9,671	2,418	19,808
2022년(6월)	628	2,453	135	881	46	3,811	809	7,145
합계	6,235	19,307	1,684	10,946	291	22,209	8,210	52,462
비고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8년 연장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중 전·월세주택자금의 만기연장을 분석을 위해 2021~2022년(1~9월)의 만기도래액 중 만기가 연장된 금액 비중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2021년 상환스케줄 상 만기가 도래한 금액(A)은 6억 4,800만원인데, 이 중 상환된 금액(B)은 5억 5,600만원이며 나머지 9,200만원은 만기가 연장(D)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원금도래액 대비 만기 연장율(D/A)은 14.2%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9월의 자료를 살펴보면, 만기 도래액(A) 76억 7천만원 중 만기가 연장된 금액(D)은 48억 7,500만원으로 2022년의 만기 연장율(D/A)은 63.6%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9월 전·월세주택자금의 만기연장율이 63.6%로 나타나는 것은 2022년 부동산시장의 매매거래 감소 및 전·월세거래량⁴⁾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역시 전·월세거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세자금 만기연장의

4) 국토교통부, '8월 주택 통계 발표', 2022.9.29.

수도권의 전월세거래량(154,448건)은 전년 동기 대비 57.3% 감소, 지방(230,943건)은 38.5% 감소하였다.

['22.8월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건)

구 분	'22.8월	'22.7월	'21.8월	증감률('22년 8월)			누계(1~8월)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5년 8월 평균비 (%)	거래량	전년 동기비 (%)	5년 8월 누계평균비 (%)
전 국	35,531	39,600	89,057	△10.3	△60.1	△56.0	385,391	△47.7	△40.8
수도권	13,883	16,734	41,668	△17.0	△66.7	△67.8	154,448	△57.3	△54.4
서 울	4,015	4,858	11,051	△17.4	△63.7	△73.9	43,818	△53.8	△59.8
지 방	21,648	22,866	47,389	△5.3	△54.3	△42.3	230,943	△38.5	△26.0

자료: 국토교통부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3년 기타민간융자금회수 계획안 산출 시 전·월세주택자금의 만기 연장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전·월세주택자금 원금회수 실적(1~9)]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1~9	평균
상환스케줄 상 만기 도래액 ¹⁾ (A)	648	7,670	4,159
회수액(B+C)	838	2,622	1,730
만기 상환액(B)	556	2,025	1,291
조기 상환액(C)	282	597	440
만기 연장액(D)	92	4,875	2,484
만기 연장율(D/A)	14.2	63.6	59.7

주: 1) 만기도래액 중 전년도에 조기상환 완료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수입의 과대 계상은 기금 수입의 수납률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출 예산의 과대 편성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023년 기타민간융자금회수 계획안에는 전·월세주택자금 융자 중 만기도래분 97억원의 전액 상환이 계획되어 있어 수입 계획안이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기타민간융자금회수 계획안 산출 시 전·월세주택자금의 만기 연장율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안이 과대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 사업 성격의 유사점을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가. 현 황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농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품질향상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다.

시설자금 사업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사업²⁾의 내역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다.

2개 사업 모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³⁾가 담당하고 있으며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설자금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안은 각각 90억원 및 48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83,153	161,800	213,800	144,633	△17,167	△10.6
농식품시설현대화	4,108	10,000	10,000	9,000	△1,000	△10.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용자)	365,697	402,882	402,882	458,446	55,564	13.8
시설자금	4,800	4,800	4,800	4,8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51-345

2)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5-404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분석의견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및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내 시설자금 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자금 사업은 지원 자격과 융자한도에서만 다소 차이날 뿐 농식품 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설자금 사업 비교]

구분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시설자금 사업
대상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식품수출업체
요건	-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 이상이거나 수출계획(계약서 입증 필)이 150천\$ 이상인 업체
사업 내용	시설현대화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80% 융자	시설현대화나 수출 관련 시설 투자 비용의 80% 융자
융자금리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상환기간	10년	10년
융자한도	최대 50억원	최대 30억원
2021년 실적	총 27억 4,800만원 지원(4개 업체)	없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둘 사업 모두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2021년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었으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58억 9,200만원을 자체 감액하였음에도, 실집행액은 27억 4,800만원에 불과하였고, 시설자금 사업은 최근 2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시설자금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당초(A)	수정				
농식품시설 현대화 사업	2018	10,000	8,348	8,348	5,716	57.2	68.5
	2019	10,000	9,109	9,109	4,159	41.6	45.7
	2020	10,000	10,000	10,000	9,722	97.2	97.2
	2021	10,000	4,108	4,108	2,748	27.5	66.9
	2022.7	10,000	10,000	10,000	0	0	0
시설자금 사업	2018	4,800	4,800	4,800	4,800	100	100
	2019	4,800	4,800	4,800	3,045	63.5	63.5
	2020	4,800	4,800	4,800	0	0	0
	2021	4,800	4,800	4,800	0	0	0
	2022.7	4,800	4,800	9,600	0	0	0

주1: 2021년도의 경우 계획액 전액(4,800백만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개의 사업 중 우선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적행률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배정규모 대비 실제 지원을 신청한 업체 수 및 금액이 적은 것에 기인한다. 최근 5년간의 배정규모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는 50% 미만인 상황이다. 이는 업체가 동 사업에 대한 배정을 받더라도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의 경우를 보면 11개 업체에 97억 7,800만원이 배정되었지만 7개 업체가 지원을 포기하고 4개 업체만 실제 지원을 받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규모 및 배정규모, 실제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연도	신청규모		배정규모(A)		실제지원(B)		배정규모 대비 지원비율(B/A)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개소	지원액	개소	금액
2018	25	43,419	7	10,000	3	5,716	42.9	57.2
2019	26	33,232	14	17,109	6	4,159	42.9	24.3
2020	23	31,782	14	20,484	7	9,722	50	47.5
2021	11	9,856	11	9,778	4	2,748	36.4	28.1
2022.9	17	26,239	4	10,000	1 ¹⁾	1,960	25	19.6

주: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2년의 경우 9월 기준으로는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배정된 나머지 3개 업체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설자금 사업 또한 실집행이 부진한 원인은 신청업체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다.

2019년의 경우 6개 업체가 신청하여 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나, 2020년의 경우에는 3개 업체만 신청하여, 신청업체 평가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1년의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신청하여 1개 업체가 배정되었으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되었고, 2022년의 경우에는 9월 현재까지 1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지원을 포기한 상황이다.⁴⁾

4) 이에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현재 2개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심사를 마친 상황으로 11월 중에 대출을 실행하여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시설자금사업 지원계획 및 실제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지원계획		신청 개소	실제지원	
	개소	계획액		개소	지원액
2018	6	4,800	1	1	4,800
2019	6	4,800	6	2	3,045
2020	6	4,800	3	-	- (전액 불용)
2021	3	4,800	2	-	- (전액 이월)
2022.9	3	4,800	1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용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에 대하여 최근 건축 자재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시설공사를 포기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행이 부진한 원인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명처럼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신청 감소 및 사업포기의 이유도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더 낮은 금리로 실시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사업과 유사하게 농식품업체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지자체 사업들의 융자 금리(1~2%)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하는 2개 사업의 융자금리(2~3%)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자체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비교]

구분	융자금리	융자한도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시설자금 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경영체 2% , 일반업체 3%	최대 50억원(농식품시설현대화)/ 최대 30억원(시설자금)
서울특별시	HACCP 적용업소: 1%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2%	최대 8억원
경기도	1%	최대 5억원
대전광역시	1%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부산광역시	1.5%	HACCP 지정업소: 최대 3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울산광역시	0.5%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1%	최대 1억원
강원도	1%	법인: 최대 10억원 개인: 최대 3억원
경상북도	1%	HACCP 지정업소: 최대 5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
경상남도	1%	최대 3억원
전라북도	1%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2천만원
전라남도	1%	최대 10억원

주: 2021년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이처럼 2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행이 저조하고, 사업내용도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자금 예산(48억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운영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대상 등을 확대하여 시설자금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포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의 핵심요소인 지원대상 및 지원목적이 상이하여 일괄하여 통합운영할 경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의 지원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 현 황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쌀의 구조적 수급 문제 해결 및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쌀가루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활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²⁾가 집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으로 2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다.

[2023년도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쌀가루 산업화 지원	-	-	-	7,100	7,100	순증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	-	-	2,500	2,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동안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 제품개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25억원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70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쌀가루 제품 개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지원 - 밀가루 대체 쌀가루 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비 80% 수준으로 지원(자부담 20%) - 쌀가루 원료 구매,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판매, 소비자 평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산업화 유도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쌀가루 제품 개발 희망업체(기업 연구소 연계) ○ 지원내용: 원료 구매비용, 제품개발비, 시제품 생산비 등
3. 기대효과	○ 쌀가루 제품 개발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자, 양산빵 등) 등을 지원하여 쌀가루 소비시장 확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도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
산출내역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2,500백만원 - 밀가루 대체 제품 15개 × 200백만원 × 80% = 2,400백만원 - 사업운영, 소비자 평가·이벤트 등 100백만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15개 제품에 대하여 쌀가루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의 8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11월 중에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출단가, 지원 업체 수,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설명인데, 이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운영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쌀가루가 수입밀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싼 점³⁾을 고려할 때, 쌀가루로 밀가루 대체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및 판매를 계획하는 업체의 수요가 중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의 선결조건인 분질미의 대량 생산 및 공급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지원을 통하여 분질미 재배를 장려한 후, 공공비축미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분질미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분질미 생산량을 20만톤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2021년 분질미 생산량이 90톤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6년 동안 약 2,222배를 증가시키려는 계획으로 동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자격, 지원 요건, 지원제품의 종류, 산출단가 등에 대한 상세자료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선행 조건인 개발 수요조사 및 분질미의 공급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향 등이 담긴 세부계획을 예산심의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된 제품이 판매되어 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의 사후관리와 성과관리도 함께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가루쌀 5,190원/kg > 국산밀가루 3,656원/kg > 수입밀 1,700원/kg (2022.9월 기준 소매가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의 가루쌀은 건식제분을 하는 밀과 달리 습식제분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제분비용이 높은 상황인데, 동 사업에 해당하는 가루쌀 품종(바로미2)은 기존 쌀과 달리 전분구조가 단단하지 않아 건식제분이 가능하여 기존 가루쌀보다는 생산비가 적다고 한다. 다만, 동 사업에 해당하는 가루쌀 품종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고자산매각대(농산물 및 종자 판매 수입) 과거 수납 규모를 반영한 적정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가. 현 황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¹⁾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중도매인 등에게 공급하고 징수한 판매대금과 식량종자 보급종 판매 수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한다.

재고자산 매각대의 2023년 계획안은 2022년 계획(7,945억 6,700만원) 대비 53억 1,900만원 감액된 7,89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582,816	794,567	794,567	789,248	△5,319	△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고자산매각대의 계획안은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 수납 규모를 반영하여 적정 수입 계획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매각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과 종자를 판매하는 수입으로 2023년 수입계획안은 7,892억 4,800만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체 수입계획안의 34%²⁾를 차지한다.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3-731

2) 34% = 7,892억(재고자산매각대) / 2조 3,274억(총 수입)

과거 재고자산매각대의 계획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계획액은 매년 8,000억원 내외로 편성되는 반면, 수납액은 5,000억원 내외로 수납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2,000억~3,000억원 정도의 규모가 과소 수납되는 등 매년 계획액이 과다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및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차이 (B-A)	수납률 (B/A)
	당초	수정(A)					
2018	743,045	743,045	743,045	543,712	543,712	△199,333	73.2
2019	803,214	803,214	803,214	499,424	499,424	△303,790	62.2
2020	810,471	810,471	810,471	578,894	578,894	△231,577	71.4
2021	797,816	797,816	797,816	582,816	582,816	△215,000	73.1
2022.7	794,567	794,567	794,567	352,281	352,281	-	4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저조한 수납률은 주로 농산물판매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계획 대비 판매액 실적을 보면 7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계획 대비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수매한 농산물은 18%, 수입한 농산물은 4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도 계획액인 7,892억 4,800만원 역시 과소 수납될 확률이 커 보인다.

[2018년~2022년 수매·수입한 농산물의 판매실적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계획		실적		실적률	
		물량(A)	금액(B)	물량(C)	금액(D)	물량(C/A)	금액(D/B)
2018	수매	56,005	77,488	28,518	69,040	51	89
	수입	327,849	586,720	267,531	411,142	82	70
2019	수매	65,536	161,741	10,522	14,731	16	9
	수입	384,802	568,571	264,911	424,129	69	75
2020	수매	60,127	106,591	34,649	95,927	58	90
	수입	396,839	626,423	256,781	425,353	65	68
2021	수매	60,127	106,591	24,783	66,647	41	63
	수입	396,839	626,423	265,684	450,934	67	72
2022.7	수매	60,429	111,527	14,738	20,397	24	18
	수입	385,032	597,880	154,229	279,258	40	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재고자산매각대의 연례적인 과다 계상은 과다한 지출 예산의 편성으로 이어진다. 실제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 수납은 여유자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 수납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4,137억원의 여유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기금 내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재고자산매각대 과소수납분 총당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여유자금 감소분	1,798	122	1,039	828	350	4,137
기타경상이전수입 초과분	428	1,324	1,396	-	-	3,148
용자원금회수 초과분	-	501	260	1,488	-	2,249
공자기금 예수분	-	-	-	-	1,800	1,800
기타	-	46	343	-	-	389
합계(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	2,226	1,993	3,038	2,316	2,150	11,72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유자금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유자금 잔액	3,032	2,910	1,871	1,043	21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기금 내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에서 재원 부족으로 자금을 배정받지 못하여 총 524억 7,2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다.

[2021년 농안기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79,800	195,800	-	195,800	183,153	12,647	-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용자)	372,882	372,882	-	372,882	365,697	7,185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0,903	88,492	-	88,492	75,446	13,046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34,508	34,063	-	34,063	14,469	19,594	-
합계(이월액)						52,472	-

주: 세부사업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례적인 재고자산매각대의 과다 계상은 기금 자체수입의 수납률 감소뿐만 아니라 과다한 지출 예산의 편성 및 여유자금 감소,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거 수납 규모를 반영한 재고자산매각대의 적정 계획을 산정³⁾하는 한편,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 등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고자산매각대의 수입편성 부처안은 평년 수준의 적정 수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지출사업 규모에 맞추어 수지를 맞추는 관행에 따라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계획안		
	부처안(a)	정부안(b)	증감(b-a)	부처안(a)	정부안(b)	증감(b-a)	부처안(a)	정부안(b)	증감(b-a)
재고자산 매각대	4,210	7,978	3,768	5,630	7,945	2,315	5,503	7,893	2,3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지은행 사업²⁾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지의 취득·소유·이용·전용 등에 대한 상시 조사·분석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 농지 종합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3년도 계획으로 각각 13억 7,900만원 및 1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	4,842	4,842	40,418	35,576	734.7
농지은행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	135	135	1,379	1,244	921.5
농지상시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	-	-	1,734	1,734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농지관리기금 1160-354

2) 한국농어촌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

나. 분석의견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검토의견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다.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3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서버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이다.

[2023년도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구분	2023 계획안
산출내역	○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구축 - 시스템구축비: 1,319백만원 - 교육 및 홍보 동영상 제작: 60백만원 ○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 시스템구축비: 691백만원 - 서버장비 및 솔루션 설치: 1,043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도 일반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본 지침(7. 정보화사업)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사업) 내 편성된 동 시스템 구축사업도 정보화 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3)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4)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할 정보화사업에 관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 또한 정보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및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의견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⁶⁾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과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 간의 중복 여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3

6)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반영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2022년 9월 30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검토의견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처럼 예산안이 편성되고 뒤늦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목적 달성을 고려한 적정 이익금 활용방안 마련 고려 필요

가. 현 황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목적으로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2018년 7월 (주)한국선박해양 및 (주)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흡수통합하여 해운전담지원 기관으로 설립¹⁾되었다.

2022년 7월 말 현재 정부는 2,300억원의 현금출자 및 항만공사 주식 현물출자 1조 3,500억원을 통해 한국해양공사 지분의 총 53.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기획재정부(일반회계)의 지분이 41.85%, 해양수산부(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분이 11.72%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주 현황 (2022.8.)]

(단위: 억원, %)

주주명		출자액	지분율	비고
정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12,342	41.85	현금 2,300억원, 현물(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 1조 3,500억원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3,458	11.72	
	소계	15,800	53.57	
한국산업은행		6,520	22.11	(주)한국선박해양 및 (주)한국해양보증 보험 자산/부채 승계 1조 3,547억원, 현금 146억원
한국수출입은행		5,478	18.57	
한국자산관리공사		1,042	3.53	
기타(민간선사 46개社)		653	2.22	
합계		29,493	100.00	-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존의 (주)한국선박해양, (주)한국해양보증보험 및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를 흡수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와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23년 예산안 상 정부출자수입²⁾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에 따른 배당 수입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한국해양진흥공사 배당 관련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915,711	858,200	1,682,597	1,078,749	△603,848	△35.9
해양진흥공사 관련	0	0	0	0	0	-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정부출자수입	7,258	1,931	1,931	4,280	2,349	121.6
해양진흥공사 관련	0	0	0	0	0	-

자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에이치엠엠(주)의 주가가치 증가로 2021년 4.8조원의 평가 이익(미실현이익)이 발생하는 등 2021년 말 현재 6.4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관 설립목적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관련 배당 규정 마련 등 적정 이익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에 1,954억 7,500만원, 2019년에는 1,599억 4,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금융상품 평가이익(투자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영업이익)이 각각 3조 5,086억 5,600만원 및 5조 3,704억 9,9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5,825억 4백만원과 4조 1,806억 2,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18년 말 대비 6조 6,109억 6,100만원 증가한 6조 3,726억 9백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2) 코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52-521 /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11-52-521

[한국해양진흥공사 연도별 손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 (2018~202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a)	2019	2020	2021 (b)	증 감 (b-a)
매출액 (영업수익)	18,929	175,895	3,508,656	5,370,499	5,351,570
영업이익	△147,587	△110,875	3,398,145	4,932,128	5,079,715
당기순이익	△195,475	△159,940	2,582,504	4,180,628	4,376,103
이익잉여금	△238,352	△390,523	2,191,981	6,372,609	6,610,961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각 연도별 별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 발생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³⁾의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2021년 말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에이치엠엠(주)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액면가 기준으로 1조 3,4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주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해당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2020년 및 2021년 공정가치 상승에 따라 관련 평가이익 또한 증가하였다. 즉, 2018년과 2019년에는 해당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각각 316억 2,600만원과 1,279억 6,900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주가 상승에 따라 2020년에는 3조 3,331억 2백만원, 2021년에는 4조 8,405억 9,700만원의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다.

3)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 등으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조 3,400억원(액면가 기준)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구 분		제192회전 환사채	제193회 신주인수권 부사채	제194회전 환사채	제195회전 환사채	제196회전 환사채	제197회전 환사채	합 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전환기간 (행사기간)	2019.10~ 2048.9.	2019.10.~ 2048.9.	2020.5.~ 2049.4.	2020.6.~ 2049.5.	2020.10~ 2049.9.	2021.4~ 2050.3.	-
	전환가격 (행사가격)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전환대상	에이치엠엠(주) 보통주						
액면가 (백만원)		200.000	300.000	50.000	100.000	330.000	360.000	1,340.000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별도 감사보고서(2021)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유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연도별 평가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수일	액면 금액	평가 손익			
				2018	2019	2020	2021
전환 완료 ¹⁾	191회 전환사채	2017-03-09	600,000	△6,228	61,117	663,606	1,652,124
2021년 말 보유	192회 전환사채	2019-03-29	200,000	-	△2,180	414,921	518,023
	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19-03-29	300,000	-	△3,270	622,382	777,035
	194회 전환사채	2019-05-24	50,000	-	△14,648	103,962	129,530
	195회 전환사채	2019-06-27	100,000	-	△29,464	208,363	259,060
	196회 전환사채	2019-10-28	330,000	-	△100,655	689,592	854,700
	197회 전환사채	2020-04-23	360,000	-	-	633,974	940,755
	소 계		1,340,000	-	△150,217	2,673,194	3,479,103
합 계 (A)			1,940,000	△6,228	△89,100	3,336,800	5,131,227
지분법 손익 (B)				△25,398	△38,868	△3,698	67,965
지분증권 전환 후 주식 평가 손실 ¹⁾ (C)				-	-	-	△358,595
평가손익 (A+B+C)				△31,626	△127,969	3,333,102	4,840,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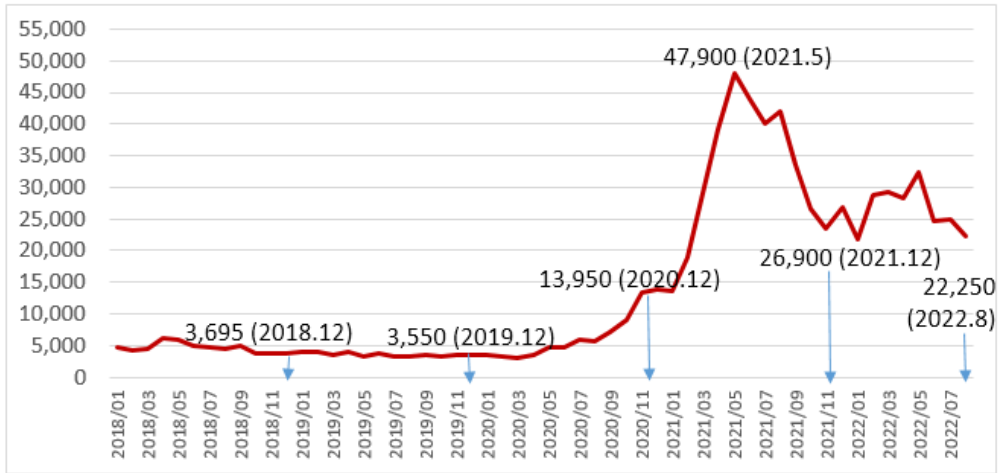
주: 1) 에이치엠엠(주) 제191회 전환사채는 2021년 10월 26일자로 전환권을 행사하였음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는 전환 또는 행사 가능한 해당 주식의 주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에이치엠엠(주)의 보통주 주가는 아래와 같이 2018년 말 3,695원, 2019년 말에는 3,550원이었으나, 2020년 12월 말에는 1만 3,950원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 5월에는 4만 7,900원까지 상승하다가 2021년 말 기준으로는 2만 6,900원 수준을 나타내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주가는 주당 2만 2,250원이다. 이와 같은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관련 평가 이익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⁴⁾

4) 에이치엠엠(주)의 주요주주는 한국산업은행(지분율 20.69%),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분율 19.96%) 등 (2022년 6월 말 기준)이다. 에이치엠엠(주)의 2021년 매출액은 13조 7,941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조 7,661억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0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다. 2021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7조 3,775억원 및 5조 3,372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7조 7,843억원, 6조 5,279억원 증가하였다. 2022년 반기 말 기준으로는 6조 857억원의 영업이익과 6조 64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에이치엠엠(주) 주가 (2018.1~2022.8)]

(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위와 같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당 이익금 활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로,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 손익금 처리 규정 중 주주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시행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및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주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에이치엠엠(주)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2022.6.
매출액	50,280	52,221	55,131	64,133	137,941	87,661	99,527
영업이익	△4,068	△5,587	△2,997	9,808	73,775	77,843	60,857
당기순이익	△11,907	△7,906	△5,898	1,240	53,372	65,279	60,648

자료: 에이치엠엠(주)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 손익금 처리규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충 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타 공공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설립근거법 또는 관련 시행령 규정상 이익배당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타 공공기관의 이익배당 관련 법령 규정(예시)〕

기관명	이익 배당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2조(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3.3조원과 4.8조원의 전환사채 등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 2.6조원과 4.2조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21년 말 현재 6.4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배당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 외에는 「상법」을 준용⁵⁾하도록 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9조⁶⁾에 따라, 해당 「상법」 제462조 상 배당한도에서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도록 하였던 바, 이에 따르면 2020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배당 가능이익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의 주주배당에 대한 시행령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처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는 손익금 처리 기준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배당한도 산출 기준 금액을 ‘순자산’으로 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이 △2조 7,791억원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없다.

(단위: 억원)

배당한도 산출 기준금액 (A, 순자산)	91,792
차감액 (B)	119,583
자본금	29,493
이익준비금(누적+당기) ¹⁾	27,763
미실현이익	62,327
배당한도 (A-B)	△27,791

주: 1) 임의적립금인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즉, 해양수산부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시행령 반영을 통해 평가이익 등의 미실현이익을 제외⁸⁾하고 최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부 유보를 통해 향후 해운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필요시에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단서조항 신설 등을 통해 향후 에이치엠엠(주) 주식 매각 등에 따라 평가이익이 실현될 경우, 이를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하여 정부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근거법 상 설립목적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해운 경쟁력 강화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확장 정책 등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수입 등 가용 재원의 정부 예산으로서의 활용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상기 이익금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목적, 향후 정부의 해운업 지원 계획, 에이치엠엠(주)의 주식가치, 정부 예산활용 필요성,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현금흐름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은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의 주주 이익 배당과 관련한 적정 시행령 규정 마련 등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적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⁹⁾

8) 현재 한국해양공사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손익과 관련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최초 승계받은 <한국선박해양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이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조정)으로 반영하고 있어, 배당가능이익 기준(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9)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0~2021년 당기순이익은 미실현 이익으로 배당금을 지출할 경우 긴급한 지원 수요 발생 시 적기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취지 및 해운업 시장의 변동성, 코로나19 이후 증대되고 있는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해운업 위기 시 공사가 대규모 지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한진해운 파산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에이치엠엠(주)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이익을 내부 자본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가. 현 황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¹⁾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²⁾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412억원 감액(△45.2%)된 규모이다.

[2023년도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역보험기금 출연	350,000	91,200	91,200	50,000	△41,200	△45.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의 예산안 500억원은, 다음과 같이 수출중소기업의 무역보험보증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과 글로벌공급망안정거래 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원으로 구성된다. 수출중소기업 무역보험보증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은 무역보험지원(보험) 예산 100억원과 무역금융지원(보증) 예산 10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역보험지원(보험) 예산은 3,000억원 지원 계획에 30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무역금융(보증) 예산은 1,250억원 지원을 위해 운용배수를 12.5배로 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글로벌공급망안정거래 지원(보증) 사업 예산은 3,750억원 지원 계획에 12.5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1138-881

2) 무역보험제도는 우리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보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을 말한다. 즉, 무역보험의 주요 기능은 대외위험 보장기능(보험)과 금융조달기능(보증)이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 근거]

구 분	내 용	산출 근거
수출중소기업 무역보험보증 지원	(무역보험 - 보험) 단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비상위험(전쟁 등)도 담보 가능하도록 하여 무역거래의 불확실성 해소	100억원(예산) × 30배(운용배수) = 3,000억원(지원)
	(무역금융 - 보증)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선적전 수출이행자금 지원과 조기현금화를 위한 선적후 매출 채권 매입보증 지원	100억원(예산) × 12.5배(운용배수) = 1,250억원(지원)
글로벌공급망 안정거래지원	(보증) 무역갈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훼손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거래 지원	300억원(예산) × 12.5배(운용배수) = 3,750억원(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의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감소 및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추이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증 운용배수 상향 등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³⁾의 2018~2021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8.7배에서 2021년 26.5배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보험·보증 유효계약금액을 기금 총액으로 나눈 배수를 말하며, 낮을수록 기금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기금 배수(2018~2021)]

(단위: 억원, 배)

연도	기금 총액 (A)	유효계약금액 (B)	기금 배수 (B/A)
2018 (a)	14,766	719,282	48.7
2019	19,696	743,251	37.7
2020	24,534	733,979	29.9
2021 (b)	30,385	803,900	26.5
증감 (c=b-a)	15,619	84,618	△22.2
증감율 (c/a)	105.8	11.8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18~2021년간 유효계약금액이 8조 4,618억원 증가하여 증가율이 11.8%를 나타낸 반면, 기금 총액은 2018년 1조 4,766억원에서 2021년 3조 385억원으로 1조 5,619억원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105.8%로 크게 발생하였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기금 총액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기금의 연도별 재정운영결과 이익 발생과 지속적인 정부 출연에 따른 것이다. 2018~2021년간 무역보험기금에서는 6,418억원의 재정운영결과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정부 예산으로 1조 1,381억원의 출연금이 지급되었다. 2018~2021년간 해당 재정운영결과 이익 발생과 정부출연금으로 인한 기금 순자산 증가금액 합계는 1조 7,799억원 수준이다.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재정운영결과 및 정부출연금 내역 (2018~2021)]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재정운영결과 ¹⁾	1,596	2,987	△1,155	2,989	6,418
정부출연금 ²⁾	800	1,350	5,731	3,500	11,381
합계	2,396	4,337	4,576	6,489	17,799

주: 1) 무역보험기금 결산 시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함. 원칙적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임은 기금에 해당 금액 만큼의 최종 원가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의 수치는 원가에 비해 관련 부담금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기금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위의 표에서는 당기 순이익, 정부출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호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무역보험기금 정부출연금은 순자산증가로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됨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산정 시 각 상품별로 적용된 운용배수 및 사고율⁴⁾에 대한 근거로, 수출중소기업무역보험보증 지원 중 보험상품 예산 100억원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기금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을 참고하여 운용배수 30배수(손실율 3.3%)를 적용하였다. 또한, 보증상품인 수출중소기업무역보험보증 지원 중 무역금융 예산 100억원과 글로벌공급망안정거래지원 예산 300억원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12.5배⁵⁾(손실율 8.0%)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산정 시 적용 운용배수 및 사고율]

(단위: 배, %)

구 분		운용배수	사고율 (1/운용배수)	참고 사고율
수출중소기업 무역보험보증지원	무역보험 (보험)	30.0	3.3	•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무역금융 (보증)	12.5	8.0	•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글로벌공급망안정거래지원 (보증)		12.5	8.0	•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아래 표에서와 같이 상기 보증상품 운용배수 산정을 위해 참고한 유사상품인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의 2012~2021년의 최근 10년간의 실제 발생 사고율을 살펴보면, 2012~2021년간의 총 평균 사고율이 3.17%로, 해당 기간 동안 연간 1.19~5.89% 정도로 발생하였다. 이는 위 2023년 예산안 산정 시 적용한 사고율 8%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0년 및 2021년 사고율은 각각 1.92%와 1.42%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행⁶⁾되어 2022년 9월 현재까지 4차례 연장되고 있는 중

4) 운용배수의 역수($1 \div \text{운용배수}$)로 산정된다.

5)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보증상품에 대하여 상기 외에도 신·기보의 보증사업 기본 운용배수 12.5배 등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

6) 금융위원회, “4월 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0.3.31.

소기업 등에 대한 전 금융권 여신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제도 시행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2년 9월 말에 대출원금 만기연장의 경우 향후 최대 3년간(2025년 9월까지), 대출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향후 최대 1년간(2023년 9월까지)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⁷⁾되었는 바, 수출신용보증의 2020년, 2021년의 낮은 사고율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2012~2021)]

(단위: 억원,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지급 금액 (a)	1,101	800	3,824	1,611	2,717	1,375	1,140	756	644	574	14,542
인수 금액 (b)	61,276	67,253	64,934	56,291	47,278	30,997	26,955	29,253	33,532	40,358	458,127
사고율 (a/b)	1.80	1.19	5.89	2.86	5.75	4.44	4.23	2.58	1.92	1.42	3.17

주: 지급금액은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금 지급금액이며, 인수금액은 보증 인수금액임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의 무역보험기금 이익 발생과 정부출연 등에 따른 기금 배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예산안 산정을 위해 참조한 유사 보증사업의 낮은 손실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3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예산안 규모 산정 시 반영된 보증 운용배수의 상향 등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차별 지원 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2022.9.27.

8) 따라서 최대 2025년 9월까지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말까지 유예 가능(2023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하다.

가. 현 황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무역보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¹⁾은 무역보험기금의 업무 수행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보험 회수금,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임차보증금 회수, 임직원대여금 회수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일반보험 회수금은 지급 보험금을 채권 추심과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²⁾한다. 2023년 무역보험기금 계획안 상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은 2022년 대비 1,158억 9,500만원(56.3%) 증가한 3,21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32,121	232,440	232,440	346,112	113,672	48.9
일반보험 회수금	111,057	206,034	206,034	321,929	115,895	56.3

주: 1) 수정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무역보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에 대하여는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비용 계획안 편성 시 반영한 수입과 동일한 규모를 적용하는 등 수입 계획안 과다 추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무역보험기금 59-596

2) 일반보험 회수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1년 결산 기준 84.1%, 2022년 계획 기준 88.6%, 2023년도 계획안 기준 93.0%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타경상이전수입에는 일반보험 회수금 외 가격변동보험환수금, 임차보증금 회수금, 임직원대여금 회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무역보험기금의 일반보험 회수금의 2017년 이후 각 연도별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124.7%, 2018년 84.4%이후 점차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에는 39.2%, 2020년 36.5%, 2021년에는 35.1%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보험기금 일반보험 회수금 수익 계획 대비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a)	191,706	264,304	290,545	240,562	316,517
집행액 (b)	239,031	223,151	113,850	87,808	111,057
집행률 (b/a)	124.7	84.4	39.2	36.5	35.1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이동 제한 및 소송 지연, 해외 현지 채권 추심활동 제약 등의 영향으로 채권 추심 활동을 통한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원인 외에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계획 추정 시, 실제 회수 예상액을 반영하기보다는 목표액을 반영하는 등 과다추정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추정액이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의 수입 추정시와 회수 관련 제반 비용 추정 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보험기금 보험금 관련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인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³⁾의 일반보험 추심 비용은 계획안 편성 시 아래와 같이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예상액에 예상 채권 회수비용 소요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다.

[일반보험 추심비용 계획안 편성 시 추정 산식]

일반보험 추심비용 예상액 = 당해연도 일반보험 예상회수금 수입 × 예상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

(*) 최근 3년 평균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3) 코드: 무역보험기금 1531-404

이 때, 위의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은 보다 정확한 일반보험 추심비용 규모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상 보험채권 잔액에 과거 평균 회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해당 금액은 2020년 2,405억 6,200만원에서 2023년 1,174억 2,000만원 수준이다.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에서 적용된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추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예상 보험채권 잔액 (a)	4,028,567	4,125,696	5,131,650	5,313,133
과거 평균 회수율 (b) ¹⁾	5.97	5.11	3.18	2.21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 예상액 (a x b)	240,562	210,613	162,981	117,420

주: 1) 2020년, 2022~2023년은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을 적용하였으며, 2021년은 최근 5년 평균 회수율 적용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런데, 이를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의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과 비교 시, 해당 수입은 2021년 이후 과다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해당 금액 간의 차이는 2023년 2,045억 9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수입, 비용 추정 시 일반보험 회수금 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수입추정 시 일반보험 회수금 (a)	240,562	316,517	206,034	321,929
비용추정 시 일반보험 회수금 (b)	240,562	210,613	162,981	117,420
차 이 (a-b)	0	105,904	43,053	204,509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일반보험 회수금 규모 추정 시, 예상보험채권 잔액에 회수율 추정치를 적용하는 등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비용 계획안에서 반영한 수입과 동일한 규모를 적용하여 수입 계획안 과다 추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에너지공단¹⁾이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사업²⁾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 용자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중 내역사업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타민간용자금과 이차보전금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차보전금 예산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목적으로 기존 용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편성되었다. 2023년의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7억 5,400만원 증가한 15억원이다.

[2023년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이차보전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326,000	308,800	270,100	263,334	△6,766	△2.5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41,490	303,800	265,100	258,334	△6,766	△2.6
기타민간용자금	241,490	303,800	264,354	256,834	△7,520	△2.8
이차보전금	0	0	746	1,500	754	10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2023년 이차보전금 예산안 15억원은 2022년 이차보전 용자금에 대한 2023년 12개월치 이차보전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즉,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다.

2)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39-302

2022년 이차보전 용자 규모를 394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차보전율 3.79%를 적용하여, 2022년에는 해당 이차보전 금액의 6개월 분인 7억 4,600만원을, 2023년 예산안에서는 12개월 분인 1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 예산안 상 별도의 이차보전 방식의 용자 계획은 없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사업 이차보전금 예산안 규모 세부 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6	2022년 이차보전 전환액 39,400 백만원 × 3.79%(이차보전율) × 6/12개월 = 746백만원	1,500	2022년 이차보전 전환액 39,400 백만원 × 3.79%(이차보전율) = 1,5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금 용자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민간 금융기관의 자체자금 용자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금 사업 민간 금융기관 모집 등 진행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금융기관 모집 공고	• 사업 공모를 통한 차입금리 제안서 접수
↓	
금융기관 대출약정 체결	• 최저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	
이차보전 용자금 차입	• 이차보전 용자금 조성 및 사업 수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나. 분석의견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사업의 2023년 예산안 15억원은 2022년 이차보전 용자에 대한 예산으로, 이차보전율의 적정성 등 고려 시 2022년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바, 2023년 예산안 규모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의 예산 규모 산정 시 적용된 이차보전율 3.79%는 아래에서와 같이 산정되었다. 즉, 2022년 1월 기준으로 16개 은행의 평균 물적담보 대출금리(2.62~3.79%)를 감안하여 3.79%로 차입금리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1.5%의 정책금리와 1.5%의 은행수수료를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다.

[이차보전율 산정 세부 내역 (2022.1.기준)]

- * 이차보전율 3.79% = 3.79%(차입금리) - 1.5%(정책금리) + 1.5%(은행 수수료)**
- 차입금리는 16개 은행의 평균 물적담보 대출금리(2.62~3.79%) 적용
 - 정책금리는 2022년 1분기 중소기업 정책금리 1.5% 적용
 - 은행수수료는 1.5% 적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년 위의 이차보전 융자금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목적으로, 2022년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차입금리 상한을 3.79%로 하여 공모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2차례 모두 공모 참여 금융기관이 “0”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이차보전금 금융기관 선정 공모 현황]

구 분	1차 공모	2차 공모
공모 기간	2022.6.21.~7.7.	2022.9.22.~10.13.
차입금리 상한	3.79%	3.79%
참여 금융기관 수	0	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이와 같은 공모 참여 금융기관 저조의 원인은 최근 기준금리³⁾ 등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22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3.79%의 이차보전율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차보전율 산정을 위해 고려한 3.79%의 차입금리는 2022년 1월

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0월 0.75%에서 2022년 1월 1.25%,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2.50%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기준 16개 은행의 평균 물적담보 대출금리 2.62~3.79%를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2년 9월 기준 16개 은행의 평균 물적담보 대출금리 수준은 3.86~5.09%로, 이의 적용 시 이차보전율은 아래에서와 같이 기준의 3.79%에서 4.84%로 상승하게 된다.

[수정 이차보전율 산정 세부 내역 (2022.9.기준)]

* 수정 이차보전율 4.84% = 5.09%(차입금리) - 1.75%(정책금리) + 1.5%(은행 수수료)	
- 차입금리는 16개 은행의 평균 물적담보 대출금리(3.86~5.09%) 적용	
- 정책금리는 2022년 3분기 중소기업 정책금리 1.75% 적용	
- 은행수수료는 1.5% 적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이차보전 외 기존 용자사업의 2022년 9월까지의 인출금액은 1,479억원으로, 예산액 2,644억원 대비 55.9% 수준이며, 2021년도 집행률도 77.9%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존 용자사업의 집행을 저조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금리·환율·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영악화, 용자지원 비율 축소⁴⁾에 따른 자부담 발생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용자금액의 실제 인출 금액이 계획 대비 부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10~2022.8)]

(단위: %)

2021/10	2021/11	2021/12	2022/01	2022/02	2022/03	2022/04	2022/05	2022/06	2022/07	2022/08
0.75	1.00	1.00	1.25	1.25	1.25	1.50	1.75	1.75	2.25	2.5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사업의 정책용자 지원비율은 2019년까지는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였으나, 혜택 받는 중소기업 수 확대 등을 위해 2020년부터는 중견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이내(ESCO 사업 외)로, 2021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은 70%로 지원한도 비율을 축소하였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Q1~2	Q3	Q4
지원 비율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100% 이내			100%	90%			
	중견기업				90%	70%			
	ESCO사업	소요자금의 100% 이내							

주: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에 대한 투자사업을 말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기타민간융자금 집행현황]

(단위: 억원, %)

지원 년도	예산 (A)	접수			총 추천			인출		
		건수	금액 (B)	비율 (B/A)	건수	금액 (C)	비율 (C/A)	건수	금액 (F)	비율 (F/A)
2020	2,960	1,371	4,123	139.3	1,355	3,670	124.0	1,061	2,795	94.4
2021	3,100	1,169	3,596	116.0	1,164	3,061	98.7	956	2,415	77.9
2022.9	2,644	992	3,188	120.6	931	2,671	101.0	618	1,479	55.9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이에 따라, 이차보전율의 적정성, 기존 융자사업의 집행률 등 고려 시, 6개월분 이차보전 금액으로 편성된 2022년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의 예산 15억원은 2022년의 이차보전 전환액에 대한 해당 이차보전 비용으로, 2022년 예산의 불용 발생 시, 2023년의 이차보전 예산 또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이차보전금 예산안과 관련하여 2022년의 불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의 관련 예산안 규모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 사업 관련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¹⁾의 내역사업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 사업은 미니피그를 활용한 차세대 동물실험기술 확보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료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융복합 동물실험 연구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7항²⁾에 근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5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며, 100% 보조방식으로 지원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56,045	82,761	82,761	51,956	△30,805	△37.2
미래의료기술연구동구축	539	5,035	5,035	5,018	△17	△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36-301 내역사업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2024년이며, 지하 1층~지상 2층(2,871㎡) 규모의 제3종 복합시설(연구시설) 건립 예정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5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06.09억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³⁾이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사업내용	(시설 구축) 미니피그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특화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 (주요시설) 미니피그 사육실(최대 50마리), 수술실, 영상분석실 등
지원분야	미니피그 활용 첨단의료기기·신약 개발 지원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3D 프린팅기반 인체 재생·재건 의료기기, 조직공학기반 생체재료, 약물전달체 마이크로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대한 유효성평가 및 생체적합성 연구지원 (혁신신약) 종양, 피부, 심혈관계, 소화기계 질환 등 난치성 질환 관련 신약 유효성 및 예비안전성평가 중점지원
용도	제3종 복합시설(연구시설)
면적	2,871㎡(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기간	2021~2024년(4년)
총사업비	156억원 (관리대상 총사업비: 106.09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156억 9백만원으로 설계비 5억 3,900만원, 건축공사비 97억 9천만원, 장비비 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장비비는 미니피그 사육시설(케이지) 및 실험기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장비는 건축공사 완료 전 설치가 필요한 건임에 따라 제작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건축공사 공정률과는 별개로 2023년 구입 예정에 있다고 설명한다.

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제4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사업 신규 등록 시 세부사업(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기준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중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④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생략)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연도별 사업비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설계비	539	0	0	0	539
감리비	0	85	85	85	255
시설부대경비	0	25	0	0	25
건축공사비	0	4,925	2,433	2,432	9,790
장비비	0	0	2,500	2,500	5,000
합계	539	5,035	5,018	5,017	15,609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건설사업 계약체결 등에 따른 일정소요계획 및 2022년 예산 이월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의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감리비 85백만원, 공사비 2,433백만원, 장비비 2,500백만원 등 5,01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예산안
· 감리비	85
· 건축공사비	2,433
· 장비비	2,500
합계	5,018

자료: 보건복지부

2021~2022년 동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설계비는 예산 5억 3,900만원 중 3억 3,300만원이 집행되어 61.7%의 집행률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는 것을 계획하여 2021년 예산을 편성하였

으나, 관련법⁴⁾에 따라 2021년 1월~4월 건축사업 계획 수립, 5월~6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진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2021년 10월에야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2021년 예산 중 40%인 2억원이 이월된 바 있다.

이후 중간설계(기본설계) 내역 조정 및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 따라, 2022년 10월 기준 설계비 잔금 지급 등 집행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예산 대비 실적현황(2021~2022.10)]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10			누적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설계비	539	333	61.7	0	0	0	539	333	61.7
감리비	0	0	0	85	0	0	85	0	0
시설부대경비	0	0	0	25	0	0	25	0	0
건축공사비	0	0	0	4,925	0	0	4,925	0	0
합계	539	333	61.7	5,035	0	0	5,574	333	5.9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10월 현재 동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중간설계(기본설계 중 일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동 검토내역에는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 증액(12~13%)(물가변동⁵⁾)으로 인함) 요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검토가 완료

4) 「건축서비스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예산반영 시점(2020년 4분기) 대비 설계단계 시점(2022년 2분기)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증액을 요구하였다.

된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동 협의가 완료된 이후 착수 가능하다. 참고로 2022년 10월 24일 기준,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의 2021~2022년 누적 예산 55억 7,400만원 중 미집행 예산(52억 4,100만원)은 전액 2023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진행내역]

일자	진행내역
2021.1~6	기본계획 수립
2021.10~2022.3	기본설계 중 계획설계 완료
2022.3~8	기본설계 중 중간설계 완료 (물가인상 반영 등으로 계획 단계 대비 총사업비 12~13% 상승 → 설계내역 조정 필요)
2022.8~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수행 중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동 사업 관련 설계내용·총사업비 증액 요구 등을 포함한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부처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일정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①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202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② 2022년 11월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③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개월 소요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④ 또한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입찰이 2023년 3월까지 2개월 간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4월 시설공사에 착수가가능하다는 것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계획이다.

물가 지수			당초금액(A)	변경금액(B)	증 액(B-A)
2020년4분기	2022년1분기	상승율	9,790,000천원	11,083,259천원	1,293,259천원
112.717	127.606	13.21%			

다만, 2022년 10월 24일 현재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총사업비 증액 등에 대한 부처 간 조정협의를 1개월 내에 완료되고, 실시설계 및 적정성 검토가 2개월 내에 완료됨을 가정한 동 계획은 사업지연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실시설계 및 적정성 검토에 2개월이 소요된다는 가정에 대해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제출자료 목록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총사업비 등이 조정되면 실시설계 시 설계 변경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동 계획이 2개월 내에 소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향후 일정(2022.10월 기준 계획)]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및 완료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부처 협의	실시설계 및 적정성 검토 요청	
'23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시설공사 (조달입찰)	시설공사						시설공사			
									CAGE, 수술실 장비 도입			
'24	시설공사							공조설비 시운전 및 시설 공사 완료		장비도입	개소	
												CAGE, 수술실 장비 도입

자료: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변경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2023년 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43.5억원)는 전체 예상 공사기간 17개월 중 2023년 내 9개월의 공사가 수행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금액이다. 만약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개월 당 4.8억원(43.5억원/9개월)의 예산이 2023년 이후로 이월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착공하게 될 시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14.5억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다.

이에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 집행 예정 내역(안)(2022.10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총 소요예산(안)	2023년 예상 소요 예산(안)	비고
건축공사비	도급공사비	8,213	4,352	8,213 × 0.53* *23년 예상 공사기간 9개월/총 공사 기간 17개월 관급자재 전량 발주*
	관급자재비	2,803	2,803	*통상 도급공사 계약 후 일정기간 내 발주 진행
장비비	-	5,000	2,500	사육케이지, 무영등, 수술대, 마취시스템 등
합계		16,016	9,655	-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총사업비 증액 등을 위한 부처간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절차를 5~6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일정이다. 동 일정은 지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22년까지 편성된 누적 예산(52억원)의 이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비가 포함된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¹⁾의 내역사업인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세포주(백신의 기초소재)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GMP기반의 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7항²⁾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53억 8,300만원 증액된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며, 100% 보조방식으로 지원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56,045	82,761	82,761	51,956	△30,805	△37.2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0	700	700	6,083	5,383	76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2022~2024년 동안 추진될 계획이며, 지하 1층~지상 2층(2,970㎡) 규모의 건물 구축을 통하여 GMP 시설 구축, 특성분석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세포주 특성분석 시험법 개발 관련 R&D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36-301 내역사업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사업내용	(1) 세포뱅크(Cell Banking) GMP 시설구축 (2) 세포주 특성분석시설 인프라 구축 및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3) 세포주 특성분석 시험법 개발 R&D 수행
면적	연면적 2,970㎡(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기간	2022 ~ 2024년 (3년)
총사업비	209.8억원(건축 109.8억원, 장비 10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20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사비 101억 2,400만원, 설계비 7억원, 장비비 1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연도별 사업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적용 요율	산출근거	금액	비고
공사비	-	2,970㎡×단가	10,124	단가: 3.41백만원/㎡
설계비	-	공사비×요율	700	
감리비	1.14%	공사비×요율	115	
시설부대비	0.24%	공사비×요율	25	
조달수수료	0.12%	총건축비×요율	13	
장비비	-	-	10,000	
합계	-	-	20,977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사업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2년 6~7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의 건축 공사로서,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³⁾임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추진경과]

일자	상세내역
'21. 7	백신개발세포주특성분석 기반구축 1차 사업계획서 작성
'22. 4	TF조직 구성 및 사업추진 로드맵 확정
'22. 6~7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의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2023년 내에 설계완료 후 공사에 착수하는 계획에 따라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사비 3,083백만원, 장비비 3,000백만원 등 6,08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예산안
· 공사비	3,083
· 장비비	3,000
합계	6,083

자료: 보건복지부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2022년 예산에 따르면,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계획에 따라 설계비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10월 현재 건축기획용역 계약금으로 2천만원 집행되어 2.8%의 집행률이 발생하였다.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예산 대비 실적현황(2022.1~10)]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설계비	700	20	2.8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의 2022년 설계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공공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안설계 공모 용역 등과 같이 ‘설계단계 착수 전 필요 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항5)에 따른 공공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2022년 9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공공건축기획 용역('22.9~12)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계획 사전 검토 시 설계 발주 방식을 '제안설계공모'로 지정함에 따라 공모 관리업무를 대행('22.9~12)할 용역업체도 선정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이 제안설계 공모가 2022년 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정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은 2023년으로 지연된 바 있다.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당초 계획 및 변경 계획]

구분	2022.1~12			2023	2024	2025
당초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3.06)				공사(~'24.12)	
변경 계획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기획 용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안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23.10.)	공사 (~'25.01 완공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⁶⁾(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 제2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규모인 건축 공사는 기본설계 4.5개월, 실시설계 7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공사비는 101억원으로, 아래의 지침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중순쯤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2022년 내 설계 전 절차를 모두 완료 후, 일괄발주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따라 2023년 1~10월 동안 설계단계를 완료하고 2023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3.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44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설계 전 절차의 지연에 따라 2022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2023년 공사비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동 사업은 공공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안설계공모 등 설계 전 절차를 2022년 내 마무리하고,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발주절차의 지연 없이 2023년 설계절차를 마무리하여야 2023년 내 공사비 관련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동 사업의 진행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3년 배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 마련 검토 필요

가. 현 황

수자원공사지원 사업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7조 9,780억원)에 소요된 채권 발행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²⁾ 및 국가정책조정회의³⁾(2009.9.25., 2015.9.24.) 등에 따른 것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4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자원공사지원	340,000	340,000	340,000	340,000	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대책 마련, 수질 및 생태계 악화 방지 등을 위해 하천정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2년 말까지 주요 공사가 추진되었다.⁴⁾ 4대강 사업 중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은 보 건설, 퇴적토 준설, 최소 수심관리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5.4조원 중 국가재정으로 7.4조원을 부담하고, 8.0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5131-309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3)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4)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2018.7.4.

[국토교통부 소관 4대강 사업 주요 내용]

- 총사업비: 15.4조원 (재정 7.4조원, 한국수자원공사 8.0조원)
- 보 건설: 16개 (낙동강 8개,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 퇴적토 준설: 4.59억㎥(낙동강 3.47억㎥, 한강 0.44억㎥, 금강 0.42억㎥, 영산강 0.26억㎥)
- 최소 수심: 낙동강 4~6m, 한강 3m, 금강·영산강 2.5~3m

자료: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2018.7.4.

이후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제72차, 2015.9.24.)에서는 4대강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재정 지원 방안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채 지원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채무 원금(7조 9,780억원)에 대하여는 발전·단지사업 등의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70% 수준(5조 5,480억원)을 분담하고, 정부가 30%(2조 4,300억원)를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관련 발생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 주요 내용]

- 先 수공 자구노력 부채상환, 後 부족 부분은 보완적 재정지원
- 수공 채무원금에 대해 수공 70%, 정부 30% 분담(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
 - (수공) 발전·단지사업, 친수사업 등 순이익을 활용 5.6조원 상환('15~'36년, 22년간)
 - (정부) 수공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2.4조원 지원('16~'31년, 16년간)
- * 수공이 채무원금 상환을 시작하면 매년 정부 이자지원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자감소 부분을 부채원금 상환 지원에 활용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따라서,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계획 상, 원금 7조 9,780억원과 관련 발생 이자 2조 8,530억원의 총 10조 8,310억원 중, 원금만을 부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분담분이 5조 5,480억원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 분담분이 5조 2,830억원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 상 4대강 부채상환 세부 분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한국수자원공사	정 부	계
분담 규모	원 금	55,480 (70%)	24,300 (30%)	79,780
	이 자	-	28,530 (100%)	28,530
	계	55,480 (51%)	52,830 (49%)	108,310
분담기간		'15~'36년(22년)	'16~'31(16년)	* 이자는 '36년까지 지원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나. 분석의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의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생 이익 및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 2,364억원 등을 고려하여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19~2022년 6월간의 각 반기별, 그리고 연간 주요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본 규모가 2019년 6월 말 8조 1,546억원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10조 7,37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채는 2019년 6월 말 14조 3,430억원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3조 4,544억원으로 감소하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2019년 6월 175.9%에서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125.3%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 증가 및 부채 감소는 4대강 사업 투자원금 등 상환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출자 및 부채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최근의 구미, 여수 등 산업단지와 시화지구 개발 등의 단지사업에서의 이익 발생 등에 따른 것이다.⁵⁾ 특히, 2022년 반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4,302억원으로 예년 대비 크게 발생하였는데, 해당 당기순이익에는 기존의 각 연도 반기 기준으로 181억원에서 629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던 기타수익이, 2,845억원 규모로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5)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421억원으로, 2019년 1,306억원 대비 2,116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4대강 사업에서의 부채 감소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1,765억원 및 구미, 여수 등 산업단지와 시화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단지사업에서의 당기순이익 증가 1,047억원 등에 기인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의 경영 성과는 수변부분의 성과가 주 요인이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건설지표가 하락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과 발생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재무현황 (2019~2022.6)]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6.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손익 현황	매출액	14,391	29,717	15,087	37,518	18,273	40,114	22,861
	영업이익	1,902	3,287	1,769	5,494	3,266	4,518	2,809
	당기순이익	275	1,306	856	3,186	2,890	3,421	4,302
	(기타수익)	(181)	(407)	(282)	(451)	(374)	(629)	(2,845)
자산, 부채 현황	자산	224,977	222,548	231,322	229,041	235,725	234,371	241,923
	부채 (a)	143,430	139,193	143,799	138,349	138,269	135,473	134,544
	자본 (b)	81,546	83,354	87,522	90,692	97,457	98,898	107,379
	부채비율 (a/b)	175.9	167.0	164.3	152.5	141.9	137.0	125.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각 반기별, 연도별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6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기타수익 2,845억원의 대부분인 2,364억원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참여 17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확인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년 12월 법원의 강제조정이 결정되었으며, 전체 손해액이 2,364억원으로 확정되어 2022년 1월 말에 해당 금액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전액 완납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연도별, 사업부별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분	계	수도		수자원			4대강사업 (정책)	경인아라 뱃길 (정책)	단지사업 (고유)	기타 (고유)
		광역요금 (고유)	지방수도 (대행위탁)	댐요금 (고유)	댐관리 (대행위탁)	댐개발 (대행위탁)				
2019(a)	1,306	1,640	25	1,222	△162	167	△3,147	△228	1,736	54
2020	3,186	1,145	△28	759	103	95	△1,648	△143	3,313	△409
2021(b)	3,421	1,213	△237	955	△371	12	△1,383	40	2,783	409
증감 (b-a)	2,116	△427	△262	△267	△208	△155	1,765	268	1,047	35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공동행위 적발·제재”, 보도자료, 2012.6.5.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 관련 주요 경과]

◦ '12. 8. 31: 입찰담합 공정위 의결
◦ '14. 2. 6: 담합 관련 형사판결 1심 선고
◦ '14. 3. 31: K-water 4대강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제기
◦ '17. 4. 10: 법원 감정인 결정
◦ '18. 7. 27: 건설사측 감정결과서 제출
◦ '19. 8월: K-water측 감정결과서 제출
◦ '21. 12. 13: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 전체 손해액을 2,364억원으로(청구액의 92%) 조정결정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편,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를 통해 마련된 정부와 한국수자원 공사 간의 4대강 부채 상환 세부 분담 계획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연간 3,400억원 규모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31년 이후에는 지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36년까지 총 5조 2,83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부채 상환 세부 분담 계획(국가정책조정회의(2015.9.))]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108,310	7,525	5,145	5,145	5,205	5,715	5,715	5,985	6,115	6,155	6,115	5,785
정부	소 계	52,830	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원 금〉	24,300	0	390	580	730	870	1,080	1,350	1,480	1,630	1,780	1,940
	〈이 자〉	28,530	0	3,010	2,820	2,670	2,530	2,320	2,050	1,920	1,770	1,620	1,460
수공	〈원 금〉	55,480	7,525	1,745	1,745	1,805	2,315	2,315	2,585	2,715	2,755	2,715	2,385
구 분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총 계			6,015	6,015	6,015	6,025	6,025	2,455	2,095	2,035	1,975	2,570	2,480
정부	소 계		3,400	3,400	3,400	3,400	3,400	710	350	290	230	170	80
	〈원 금〉		2,090	2,260	2,430	2,610	2,790	290	0	0	0	0	0
	〈이 자〉		1,310	1,140	970	790	610	420	350	290	230	170	80
수공	〈원 금〉		2,615	2,615	2,615	2,625	2,625	1,745	1,745	1,745	1,745	2,400	2,4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상기 상환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2015~2021년간의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관련 실제 관련 부채 등 상환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까지 원금이 2조 5,934억원 상환되었으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1조 3,443억원 부담하였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 상 금융비용 감소에 따른 정부 이자 지원 부담 감소분은 부채원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였던 바, 2015~2021년간 최초 계획 대비 금융비용 감소액 1,957억원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활용⁷⁾하여 정부 부담 원금은 최초 계획 대비 899억원이 추가로 상환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상황은 최초 계획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7~2018년간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에서는 정부가 연간 각각 3,400억원씩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앞의 표 참조), 실제로 2017년에는 2,778억원(△622억원), 2018년에는 2,964억원(△436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4대강 부채상환 실적 및 최초 계획(국가정책조정회의(2015.9.)과의 차이 (2015~2021)]

(단위: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015~2021		
								실적 (a)	최초 계획 (b)	차이 (a-b)
총 계	7,525	5,145	4,523	4,769	5,715	5,715	5,985	39,377	40,435	△1,058
〈원 금〉	7,525	2,224	1,965	2,385	3,474	3,841	4,520	25,934	25,035	899
〈이 자〉	0	2,921	2,558	2,384	2,241	1,874	1,465	13,443	15,400	△1,957
정부	소 계	0	3,400	2,778	2,964	3,400	3,400	19,342	20,400	△1,058
	〈원 금〉	0	479	220	580	1,159	1,935	5,899	5,000	899
	〈이 자〉	0	2,921	2,558	2,384	2,241	1,874	13,443	15,400	△1,957
수공	〈원 금〉	7,525	1,745	1,745	1,805	2,315	2,315	20,035	20,035	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앞서 설명한 2022년 1월 말 완납된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 2,364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공사대금 사업비 증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입이다. 이러한 건설사 담합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관련 4대강 부채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부채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금융비용 감소액 1,957억원과 원금 상환액 899억원 간의 차이 1,058억원은 2017년과 2018년의 정부 예산 감액분(2017년 622억원, 2018년 436억원)이다.

따라서 해당 수입을 한국수자원공사 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4대강 부채 및 관련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수입이 부채 분담에 사용될 경우, 부채의 원금상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 역시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 2,364억원의 활용 및 최근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4대상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 2,364억원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순수익금(2,135억원) 중 정부 원금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641억원의 정부 예산 및 관련 국채 발행 감축 시, 정부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⁸⁾

8)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을 전액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수익 2,364억원에서 법인세 납부 예상액(유효세율 9.68%) 제외 후의 순 수익금(2,135억원) 중 정부 원금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641억원이다.

아래와 같이 정부가 2023년 수자원공사지원 출자금 예산 3,400억원에서 641억원을 차감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B), 관련 정부 지출액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총 2조 6,212억원이다. 반면, 2023년 정부가 수자원공사 출자금 예산 3,400억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A) 관련 정부 지출액은 2조 6,863억원으로 양 방안 간의 차이가 651억원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지원 출자금 예산에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을 반영하는 것이 정부 지출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의 2023년 정부 예산 반영 시 정부 예산 절감분 비교]

(단위: 억원)

비 고	2023년 예산안 (A)	수익의 예산안 차감 (B)	차이 (B-A)	비 고
2023년 예산 반영 여부 고려한 정부 지출액 비교 (a+b+c)	26,863	26,212	△651	-
2023년 정부 예산 지 원액 (a)	3,400	2,759	△641	각 가정에서의 예산 반영분 차이
2023년 정부 예산 지원 관련 향후 10년간 국고채이자발생 예상액 (b)	1,394	1,131	△263	각 가정에서의 정부 예산액 지원을 위한 국고채 이자(2022년 9월말 10년물 이자율 4.1%), 10년 발생 가정
2036년 까지 수자원 공사 총부채 이자 발생액(c)	22,069	22,321	252	수익의 예산안 차감 시(B) 641억원 만큼 4대강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며, 2023년 예산안(A) 가정 에서는 전액 4대강 부채 상환 가정, 2022년 9월 말 수공채 10년물 이자율 4.5% 반영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¹⁾은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3년 163억 4,5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²⁾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3년 144억 1천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0	0	0	16,345	16,345	순증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	0	0	0	14,410	14,41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증권·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녹색경제활동 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되며 2023년 예산안으로 각각 96.8억원, 40억원, 7.3억원이 편성되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7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3년도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안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	14,410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9,680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4,000
녹색경제활동 확산기반 구축사업	730

자료: 환경부

이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³⁾)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주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회사채(이하, 녹색채권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신용도가 낮고 녹색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금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은 2023~2024년이며, 2023년 예산안에는 녹색채권 발행 시 금리지원 30억원 및 녹색채권 외부검토비용 10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역
개요	중견·중소기업의 신용도 보강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유동화증권 발행
필요성	녹색경제활동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
대상	시범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사업기간	2023~2024년(2년)
지원규모	총 40억원(금리 지원 30억원, 외부검토비용 지원 10억원)

자료: 환경부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 사업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Green Asset-backed Security의 약자이다.

4) 녹색채권은 녹색경제활동(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동 사업에서는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판단’과 ‘녹색채권 외부검토’를 득한 채권으로 표현되고 있다.

2023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예산안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경우 조달비용인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금리지원 예산 30억원** 및 녹색채권 발행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외부검토비용 1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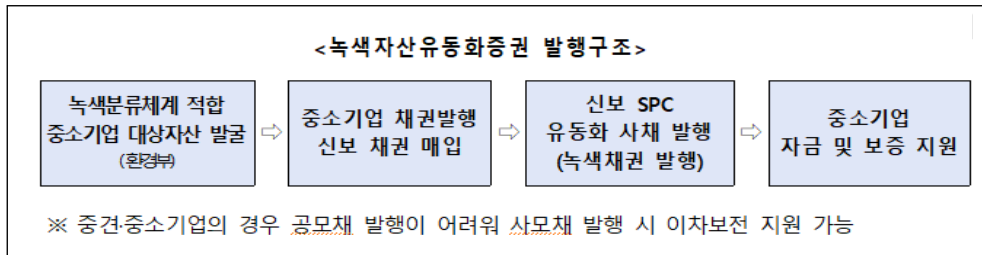
구분	산출근거	예산안
GABS 기초자산 편입금리 지원	채권 발행액 1천억원 × 금리 지원 3.0% ^{*1)} = 3,000백만원 *1) 회사채 3년물 신용등급별[AAA vs. BBB-] 금리 차이(6%) × 지원율 50%	3,000
중소·중견기업 외부검토비용	50개사 ^{*2)} × 녹색사모채 외부검토비용 지원(건당 20백만원) × 지원율 100% = 1,000백만원 *2) 1천억원 규모의 GABS 발행시 약 50개 기업(기업당 10~30억원 정도의 회사채 발행)의 기초자산 편입 가정	1,000
합 계		4,000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②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담기관 또는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및 ‘녹색채권 외부검토’ 후, ③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한 SPC에서 동 채권(②)을 충족한 자산에 한함)을 매입한 후, ④ SPC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채권으로 구성된 유동화 증권(GABS)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동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녹색채권이 편입된 중견·중소기업은 회사채 금리의 일부(3%) 및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및 재무 안전성이 낮은 중견·중소기업도 장기(3년)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대기업 중심인 국내 녹색채권 시장에 중견·중소기업이 녹색채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절차]



주: 동 표에 나오는 SPC는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뜻함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업은 녹색채권 발행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GABS 기초자산 편입금리 지원’ 사업은 녹색채권발행 목표액인 1천억원을 대상으로 3%의 금리를 지원⁵⁾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의 기준이 된 녹색채권 발행규모 예상액 1천억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3개년 동안 발행한 유동화증권 한 차수 당 평균 채권발행규모가 약 2,100억원인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것은 국내 최초 시도임에 따라 보수적으로 약 50% 수준(1천억원)의 발행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자산 발행 시 한 기업당 평균 발행채권규모가 약 20억원임에 따라 50개사가 20억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총 1천억원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금리지원의 경우 중견기업(신용도 BBB-: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최저등급의 신용도)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대기업(신용도 AAA 가정)인 회사에 비해 조달금리가 6% 높을 것으로 보고 이 중 50%인 3%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3개년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발행현황(환경부 제출)]

(단위: 차수, 백만원, 개)

구분	2020	2021	2022. 1~6	합계	평균
신용보증기금 발행횟수(A)	21	24	14	59	19.7
발행규모(B)	4,805,968	5,098,245	2,525,414	12,429,627	4,143,209
한 차수 당 발행규모(B/A)	228,856	212,427	180,387	621,670	207,223
기초자산 대상기업수(C)	2,360	2,061	1,037	5,458	1,819
기업 당 발행규모(B/C)	2,036	2,474	2,435	6,945	2,315

주: 환경부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선순위 발행기준, 기초자산에 편입되는 대상기업 세부 내역은 확인이 불가함

자료: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가 기준으로 삼은 최근 3년 간 발행현황에 나타난 ‘기초자산 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해당되는 일반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례에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녹색채권이 아닌 일반 회사채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규모 추정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초자산 대상기업수와 증권 발행규모가 과대되어 있고, 중견·중소기업 및 녹색채권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금리 보전 시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녹색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을 영위 또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발행 대상기업 기준(환경부 제출)]

지원 분야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주력산업	• 정부지정 4대 주력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업종 영위기업 •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이 가능한 기업

주: 환경부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선순위 발행기준, 기초자산에 편입되는 대상기업 세부내역은 확인이 불가함

자료: 환경부

참고로 2022년 8월 기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총 19조 2,200만원으로, 회사채 16조 8,900만원 및 특수채 2조 3,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4조 9천억원이며, 일반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14조 3,200만원인데, 일반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원화녹색채권 발행현황(2022.8)]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금융/비금융		공공기관/일반기업		합계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공공기관	일반	
건수(회사채)	50	132	43	139	182
금액(회사채)	4,838,000	12,052,000	2,890,000	14,000,000	16,890,000
건수(특수채)	5	13	15	3	18
금액(특수채)	880,000	1,450,000	2,010,000	320,000	2,330,000
건수(합계)	55	145	58	142	200
금액(합계)	5,718,000	13,502,000	4,900,000	14,320,000	19,220,000
비중	29.75%	70.25%	25.49%	74.51%	100.00%

자료: 한국거래소

녹색채권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조건이 까다롭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채권 발행체계를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도입 시, 녹색경제활동 영위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거나 공모 신청 기업 수가 계획에 미달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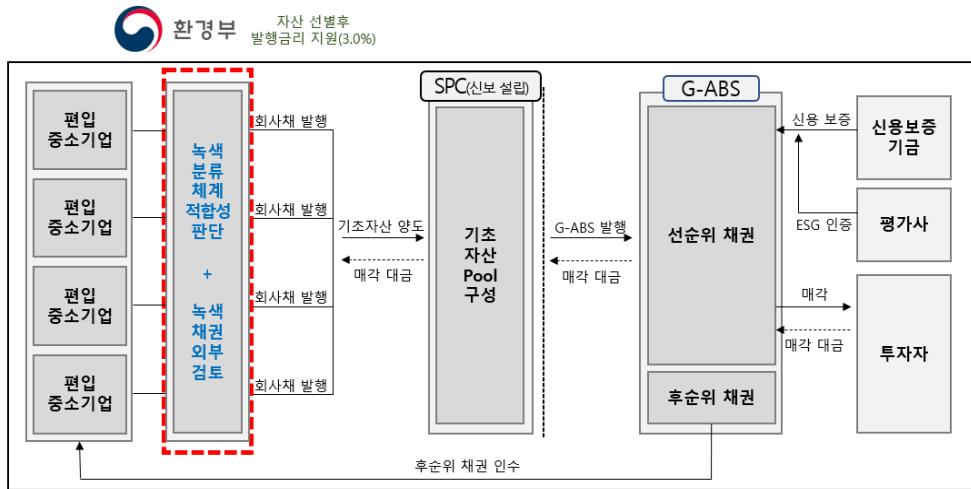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 예산안 규모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녹색채권 발행규모 추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주요 기관 및 부처(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업 계획 상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녹색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주체⁷⁾로 신용보증기금의 SPC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대상으로 명시된 신용보증기금 및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자산 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통해 발생한 수익 등으로 원리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구조]



주: 동 표에 나오는 SPC는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뜻함

자료: 환경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간 합의절차가 완료된 이후, 환경부에서 녹색채권으로의 적합성 판단을 마친 중소기업 채권을 추천할 경우, 채권 발행 대행기관으로써 녹색채권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녹색채권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추진 방향과 구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연간 총 1천억원 규모로 유동화증권을 발행(1~2회) 하기로 하였으며,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적합 여부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의 책임 하에 일정요건을 갖춘 외부검토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시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 실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운영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동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3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녹색채권을 가장한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녹색금융 확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green washing)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녹색금융 대상인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기업,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녹색채권 평가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그린워싱이 감소할 수 있다⁹⁾는 논리이다.

한국 정부 역시 녹색채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2020.12)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을 분류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¹⁰⁾(이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을 발표(2021.12)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앞으로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8) 그린워싱은 초록색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9)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2022.2, KIF 정책분석보고서, 임형석

1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 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설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활동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녹색채권 관련 국내외 규정]

구분	상세내역	
관련 규정	녹색채권원칙(GBP), (2014) 사회적채권원칙(SBP)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BG) (2018)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 발표 ◦ 자발적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으로 4개 핵심 구성요소 ◦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로 구성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BG) (2020.12)	◦ 금융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제정한 녹색채권 안내서 ◦ 녹색채권 정의, 관리체계, 외부기관의 검토, 부속서 등으로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 (2021.12)	◦ 환경부가 EU,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 ◦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 및 기준, 판단기준 제시

자료: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II」, 2022.8, p.241,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볼 때 3%의 높은 이차보전률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환경책임투자 관련 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이며, 녹색채권 발행 사례가 없는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권발행자들의 규정이해도가 낮을 경우 환경책임투자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한 일부 사례에서도 그린워싱으로 보이는 예가 발생¹¹⁾하고 있어, 녹색채권에 익숙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은 더욱이 동 가이드라인이나 녹색분류체계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녹색채권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중견·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공공기관 녹색채권 발행현황과 개선과제」, 2021.8., pp.194~202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용자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¹⁾은 최신 방지시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제81조제1항²⁾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64억원 감액된 36억원이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동 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21~2022년 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용자방식으로 지원해오다가 2023년부터 이차보전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였다.

[2023년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200,000	190,000	110,000	3,600	△106,400	△96.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14 내역사업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환경부에 따르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유사·시멘트 제조사업장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 적정성(기업 및 설비) 여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A)을 통해 채권보전심사 후 용자 여부를 결정 한다.

(자금용자) 금융기관(A)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금차입약정’을 체결한 금융공공기관(B)으로부터 용자금 차입 후, 동자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A)으로 대여한다.

(자금상환) 금융기관(A)이 지원대상 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한 이후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환하고,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금융공공기관(B)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민간조달금리로 원금을 대여한 금융공공기관(B)에 분기별로 2%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2023년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절차]

구분	역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① 기업 공고 및 심사, ② 금융공공기관과의 자금차입체결을 통해 민간조달금리로 자금 차입 후 금융기관과의 자금대여약정을 통해 정책금리로 재대여 ③ 금융공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을 금융공공기관에 상환
금융기관 (A)	① 담보 심사 및 설정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약정을 통해 차입한 용자금을 지원대상 기업에 재대여 ③ 지원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환
금융 공공기관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자금대여약정을 통해 민간조달금리로 자금 대여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3년 예산안의 산출근거 상 용자규모 추정액 1,800억원은 2021~2022년 집행실적으로 미루어보아 과다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2023년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에 따르면 용자규모 1,800억원(6개사*300억원)은 2022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차보전률 2%는 과거 5년 평균 민간조달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동 사업은 2021~2022년 동안 용자사업³⁾으로 진행되다가 2023년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전환된 것으로, 환경부는 ‘이차보전 사업 운영 시 적은 재정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에 용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한다.

[2023년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이차보전금(320-05): 3,600백만원
· 6개사 × 30,000백만원 × 2%(금리차) = 3,600백만원

자료: 환경부

2021~2022년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자금 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의 실집행율은 42.9%(2,000억원 중 857억원 집행)이며, 2022년 9월 기준 예산⁴⁾ 실집행율은 33.2%(1,384억원 중 460억원 집행)로 나타나고 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집행내역(2021~2022.9)]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1	300,000	200,000	200,000	200,000	-	200,000	85,658	28,435	85,907	42.9
2022.9	190,000	110,000	110,000	110,000	28,435	138,435	46,042	미정	미정	33.2

자료: 환경부

3) 15개 시중은행을 통한 담보대출방식으로 진행되며, 동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용자취급은행과의 사전상담을 선행(환경정책자금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4) 2021년 이월된 예산 및 2022년 예산의 실집행을 모두 고려하였다.

2021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5개 업장(시멘트업)이 용자금 1,191억 2,30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 중 1,143억 9,300만원(예산 대비 57.1%)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이 대출집행을 지연⁵⁾함에 따라 승인금액 중 2021년 내 실집행은 857억원(실집행률 42.9%)에 그쳤으며, 예산 중 284억원이 2022년으로 이월, 859억원이 불용된 바 있다. 참고로 2021년 예산 이월액(284억원) 중 257억원이 2022년 추가 집행되었다.

2022년 예산 집행현황을 2022년 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4개의 사업장이 745억(2022년 예산 대비 67.7%)원의 용자를 신청하였으며, 742억원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사유와 같이 지원대상 기업이 대출집행을 지연함에 따라 2022년 예산의 실집행은 204억원(예산 대비 18.5%)에 그치고 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연내 1,800억원의 용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의 용자승인금액 및 대출집행액이 1,800억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자금 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2021~2022.9)]

(단위: 억원, %)

연도	용자 신청 및 승인				자금 집행				이월액 실집행 (B)	누적 실집행 (A+B)
	신청 기업수	용자 신청 금액	지원 기업수	용자 승인 금액	예산	실집행 (A)	이월액	불용액		
2021	5개 업장 (18개 설비)	1,191 (59.5)	5개 업장 (16개 설비)	1,143 (57.1)	2,000 (100.0)	857 (42.9)	284 (14.2)	859 (42.9)	257	1,114
2022.9	4개 업장 (9개 설비)	745 (67.7)	4개 업장 (9개 설비)	742 (67.7)	1,100 (100.0)	204 (18.5)	미정	미정	-	204

주: 1. 2022년 지원 기업 중 3개 기업은 2021년 신청 기업과 중복됨

2. 괄호 안은 각 해 예산 대비 비율임

자료: 환경부

5) 기업의 시설 설치 자금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또한 사업체에서 이 자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기에 맞춰 용자를 대여함에 따라 실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조항」 제13조에 따르면 용자금은 승인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변 민원 해소,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기술원의 승인을 통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시장침체로 인하여 사업장이 환경설비 개선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을 보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환경부가 2022년 3월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용자 수요조사⁶⁾ 결과, 시멘트업 및 석유정제업 영위기업 중 7개사에서 1,968억원의 용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는 이와 유사하게 6개사에 대한 1,800억원 규모 용자를 가정하여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앞선 2020~2021년 대출집행내역과 같이 용자승인금액 및 대출집행액이 1,800억원을 초과한 적은 없으며, 용자승인 이후 1년 내 대출집행이 전액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1,800억원이 모두 대출집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은 2021~2022년 진행 중인 동 용자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상 용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자비용은 대출집행 후 대출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이차보전 방식의 예산안 편성 시 연내 용자금 신청~대출집행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여 이자비용의 발생 가능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은 2021~2022년 용자지원 방식에서 2023년 이자비용의 보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내 이자비용의 발생 가능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용자 운용조항」 상 용자승인일로부터 240일 가량 대출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출집행의 지연 가능성도 고려하여 이자발생기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용자 지원신청부터 대출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평균 기간은 250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자비용 발생 전 선행되어야 할 절차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2023년 내 이자발생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3년 예산안이 편성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이자발생기간을 6개월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참고로 2021년 동 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은 중소·중견 미세먼지 대량배출 사업자 중 시멘트업체 9개사였으나, 2022년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정제품 제조업(대기업 포함) 4개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업명	구분	2023년 예산안 및 산출근거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	기후대응 기금	이차보전 1식 × 24,250백만원 A. 14,250백만원 $= [(3.52\text{조(용자규모)} \times 1.62\%① \times 50\%② \times \mathbf{50\%(6개월)})]$ ① 녹색정책금융상품 운용 금융기관의 평균이자지원율, ② 국고 50%, 지원금융기관 50% B. 10,000백만원 ③ 이차보전상품 특성상 이차지원 기간 동안 과거연도 지원금액 누적 지원
미래환경 산업육성 용자	환경개선 특별회계	A. 재정용자금 270,000백만원 = 기업당 평균 5억원 × 540개소 B. 이차보전 8,893백만원 = 신규민간차입 이차보전* 1,000백 만원 + 그간 민간차입 이차보전 7,893백만원 * 신규 민간차입 용자를 위한 이차보전금 1,000백만원 = $1,000\text{억원} \times \text{이차보전율 } 2\% \times \mathbf{6\text{개월}/12\text{개월}}$

자료: 환경부

따라서 동 사업은 과거 대출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용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용자금 신청, 승인, 대출집행의 소요일정 및 이차발생기간을 면밀히 추정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예산 보증료 수입의 적정한 추계를 통한 편성 필요

가. 현 황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 주체는 근로복지공단¹⁾이다.

근로복지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입금, 보증료·구상금·지연이자 및 기금운용 수입금, 기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계정, 신용보증사업계정 및 실업대책사업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소기업계정은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을, 신용보증사업계정은 중소기업계정 및 타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용자사업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실업대책사업계정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계정의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사업²⁾은 신용보증사업계정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동 사업 계획으로 2022년 계획(187억 7,700만원) 대비 49억 3,900만원(26.3%)이 증액된 23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0	18,777	18,777	23,716	4,939	26.3

자료: 근로복지공단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9301-860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사업계정의 보증료 수입이 과소 편성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정의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보증료 수입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한편,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예산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사업은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많은 경우, 해당 차액을 중소기업계정에서 보전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 23,716백만원[= 37,720백만원(총지출) - 14,004백만원(자체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자체수입 계획(140억 4백만원)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신용보증사업계정 자체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금액	비고
신용보증사업계정 자체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22	기타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9,620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 등
	면허료및수수료	4,362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수입
	합계	14,004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 중 면허료및수수료(보증료 수입액)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3)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그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신용을 보증 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받는 수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자금액이 클수록 보증료 수입 또한 늘어나게 된다. 2023년 보증료 수입 계획안인 43억 6,200만원은 2023년 용자계획 추정치인 1,497억 1,400만원에 용자실행률과 보증료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3년도 면허료및수수료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3년 용자계획액 추정(A)	용자실행률 (B)	보증료율 (C)	보증료 수입 계획안(A×B×C)
근로자생활안정자금	85,071	84.91	2.978	2,151
체불근로자생계비	9,368	64.63	3.309	200
소액생계비	3,391	100	1.800	61
직업훈련생계비	36,927	94.15	4.395	1,528
산재생활안정자금	14,957	99.52	2.837	422
합 계	149,714	-	-	4,362

주1: 용자계획은 예산 편성 당시 용자 예산 요구액 기준

주2: 용자실행률은 2021년 용자실행률을 적용

주3: 보증료율은 용자금액 대비 전체 보증기간에 대한 총 보증료의 비율로, 다양한 상환기간을 반영하여 산출

자료: 근로복지공단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보증료 수입 계상을 위해 추정한 용자 계획안은 1,497억 1,400만원인 반면, 각 사업별로 실제 편성된 용자 계획안은 총 2,375억 3,300만원으로, 추정안과 실제 편성 예산 간의 큰 차이[878억 1,900만원(추정액 대비 59%)]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제보다 보증료 수입이 과소 추정(24억 3,800만원⁴⁾)되어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2023년도 면허료및수수료 계획 상의 용자계획과 실제 사업별 용자계획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보증료 수입 계상을 위해 추정한 용자계획(A)	실제 사업별 예산 편성액(B)	차액(B-A)
근로자생활안정금	85,071	144,250	59,179
체불근로자생계비	9,368	18,369	9,001
소액생계비	3,391	5,750	2,359
직업훈련생계비	36,927	53,520	16,593
산재생활안정자금	14,957	15,644	687
합 계	149,714	237,533	87,819

자료: 근로복지공단

4) 2,438백만원 = 6,800백만원(2023년 실제 사업별 용자계획을 반영한 보증료 수입)
- 4,362백만원(2023년도 계획 상의 보증료 수입)

[2023년도 면허료및수수료 계획 상의 보증료 수입과
실제 사업별 융자계획을 반영한 보증료 수입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계획 상의 보증료 수입				2023년 실제 사업별 융자계획을 반영한 보증료 수입				보증료 차액 (H-D)
	23년 융자계획액 추정 (A)	융자 실행률 (B)	보증 료율 (C)	보증료 수입 계획안 (D=A× B×C)	23년 실제 융자계획 (E)	융자 실행률 (F)	보증 료율 (G)	보증료 수입 (H=E× F×G)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85,071	84.91	2.978	2,151	144,250	84.91	2.978	3,648	1,497
체불근로자 생계비	9,368	64.63	3.309	200	18,369	64.63	3.309	393	193
소액생계비	3,391	100	1.800	61	5,750	100	1.800	104	43
직업훈련 생계비	36,927	94.15	4.395	1,528	53,520	94.15	4.395	2,215	687
산재생활 안정자금	14,957	99.52	2.837	422	15,644	99.52	2.837	442	20
합 계	149,714	-	-	4,362	237,533	-	-	6,800	2,438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각 융자사업 규모가 증가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편성된 융자계획안을 반영하여 보증료 수입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이에 따라 조정되는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계획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울산병원 신축 사업은 산재병원지원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재의료재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199억 5,400만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²⁾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관련 예산으로 2022년 예산(229억 7,000만원) 대비 534억 9,300만원 증액된 76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울산병원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재병원지원	29,982	54,820	54,820	94,531	39,711	72.4
울산병원 신축	4,097	22,970	22,970	76,463	53,493	232.8

자료: 고용노동부

[울산병원 신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 2026년 (당초 2020년 ~ 2024년)
총사업비	2,200억원(국비) (공사비 1,524억원, 시설부대경비 157억원, 장비비 319억원, 연구장비 80억원, 전산비 120억원)
사업규모	47,962㎡(지하 2층 ~ 지상 8층)
주요시설	의료시설(일반병동 120병상, 재활 160병상) R&D 연구소(재활보조기 연구실, 직업병 연구실 등) 일·가정 적응재활훈련센터(일상생활복귀훈련체험실 등) 지하주차장(229대)

자료: 근로복지공단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4054-350

2)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분석의견

울산병원 신축 사업은 문화재발굴조사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3년도 예산안 765억원 중 513억원이 2024년 이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이 필요하다.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2020년에 착수하여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발굴조사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2026년 완공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울산병원 신축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 예산안
산출내역	■ 2023년 예산안: 76,463백만원 ○ 공사비: 64,481백만원(건축비 및 감리비) ○ 시설부대경비: 9,482백만원(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 전산비: 2,500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비: 450백만원 - 시스템구축비: 2,050백만원(1차년도 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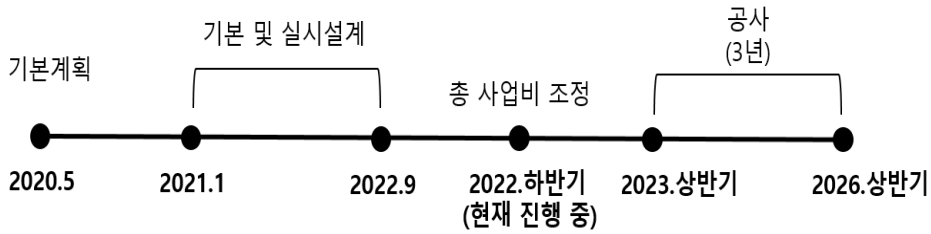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신축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제 추진 현황]

구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상황	비고
기본운영계획 수립	2020.4	2020.5	
기본 및 실시 설계	2020.12. ~ 2021.10.	2021.1. ~ 2022.9.	· 1차 설계 중지(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지반조사 설계 불가) - 중지기간: 2021.3 ~ 2021.9(6개월) · 2차 설계 중지(1차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 - 중지기간: 2022.3 ~ 2022.9(6개월) ※ 2022.9.6. 1차 총사업비 조정완료
2차 총사업비 조정	-	조정 협의 중	
건축공사	2021.12 ~ 2024. 하반기	2023. 상반기 ~ 2026. 상반기	
개원	2025년	2026년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울산병원 신축 사업 추진 경과 및 예산 편성 경과]



예산 편성 경과

- 2022년 예산(22,970백만원) : 공사비 22,207백만원, 시설부대경비 763백만원
- 2023년 예산안(76,463백만원) : 공사비 64,481백만원, 시설부대경비 9,482백만원, 전산비 2,500백만원

동 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설계지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단가 상승, 감염병 대응 음압병상 설치 관련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조달청 적절성 검토 등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장기화되었고, 이에 2022년 9월 6일자로 1차 총사업비 조정을 마치고, 연도별 사업비 배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또한 2022년 공사비 예산은 이월 예정3)이다.

[1차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울산병원 신축 사업 연도별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공사비	-	500	22,207	23,469	40,537	64,921	762	152,396
장비비	-	-	-	-	-	6,550	25,359	31,909
연구장비	-	-	-	-	-	-	8,000	8,000
전산비	-	-	-	450	8,093	1,317	2,140	12,000
시설부대경비 등	4,250	3,597	763	1,273	2,200	3,524	42	15,649
합계	4,250	4,097	22,970	25,192	50,830	76,312	36,303	219,954

자료: 근로복지공단

- 3) 동 사업은 2022년 공사비 예산으로 2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설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 9월에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계약 입찰 절차, 공사준비기간(45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은 2023년도에 이루어져 2022년도 공사비 예산 222억 700만원은 전액 이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규모에 따른 경우 2023년도 사업비는 251억 9,200만원(공사비 235억원, 전산비 4.5억원, 시설부대비 13억원)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764억 6,300만원 중 512억 7,100만원(76,463백만원 - 25,192백만원)은 2024년 이후로 조정될 예정이다.⁴⁾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총 사업비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 764억 6,300만원 중 512억 7,1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1차 총사업비 조정 전에 편성되었으며, 부득이 정부 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9월 2일) 이후인 9월 6일 1차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 공동훈련센터의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투자 비율 확대 필요

가. 현 황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기업·사업주 단체 등이 설립한 공동훈련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²⁾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³⁾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계획으로 22년 계획(763억 9,1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77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99,086	131,882	131,882	144,521	12,639	9.6
대중소공동훈련지원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지원)	17,569	16,500	16,500	77,571	61,071	3.7
전략분야인력양성지원	39,515	40,347	40,347	-	-	-
미래유망분야맞춤형 훈련	12,668	19,544	19,544	-	-	-
계	69,752	76,391	76,391	77,571	1,180	1.5

주: 2023년도 계획안에서는 예산상 사업 칸막이를 없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3개의 내역사업(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지원, 전략분야인력양성지원, 미래유망분야맞춤형훈련)을 1개의 내역사업(대중소공동훈련지원)으로 통합함

자료: 고용노동부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4-350

2) 유사사업군·동종업계·협력사 관계에 있는 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

3) 고용노동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분석의견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높은 상황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훈련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은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⁴⁾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전략분야인력양성지원 사업,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⁵⁾을 통합한 사업이며, 2023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구분	2023 계획안
산출내역	○ 공동훈련센터 지원: 77,571백만원 - 일반(159개 × 409백만원) + 첨단(기존 15개×500백만원+신규 5개×1,0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따른 비용지원은 기업·사업주 단체 등이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6년)하거나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기간을 연장(1년 단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지원 비율: 훈련시설·장비비 및 인건비(80%),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100%)

5) 내역사업 개요

내역사업	개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설립한 공동훈련센터 지원
전략분야인력양성지원 사업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공동훈련센터 지원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사업	신기술·소재·부품·장비 부분 등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 지원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2021년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2020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미래유망맞춤형훈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 사업 보조금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2021년 공동훈련센터 보조금의 인건비·운영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시행시점	총 지급액 (A)	인건비 (B)	운영비 (일반+과정) (C)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 (B+C)/A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지원	2001년	13,319	7,271	2,277	71.6
전략분야 인력양성 지원	2010년	38,923	8,850	24,721	86.2
미래유망맞춤형훈련	2020년	12,668	2,150	843	23.6
합 계	-	64,910	18,271	27,841	71.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체적으로는 공동훈련센터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공동훈련센터의 설립 초기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만, 연차가 오래될수록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지원 사업의 연차별 보조금 사용 현황(2021년)]

(단위: 개소, 백만원, %)

연차	센터수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장비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총 지원액 (B)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 (A/B)
		인건비	운영비	소계(A)				
5년 이하	16	1,387	500	1,887	1,561	186	3,673	51.4
6년 ~ 10년	9	818	280	1,098	233	0	1,482	74.1
11년 ~ 15년	26	2,712	810	3,522	279	9	4,125	85.4
16년 ~ 20년	13	1,955	557	2,512	552	0	3,383	74.3
21년 ~ 22년	3	399	130	529	32	0	656	80.6
합 계	67	7,271	2,277	9,548	2,657	195	13,319	71.6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력분야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연차별 보조금 사용 현황(2021년)]

(단위: 개소, 백만원, %)

연차	센터수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장비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총 지원액 (B)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 (A/B)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과정 운영비	소계(A)				
5년 이하	3	263	137	1,734	2,134	1,852	90	4,115	51.9
6년 ~ 10년	41	5,574	1,470	13,494	20,538	1,425	50	22,893	89.7
11년 ~ 15년	24	3,013	797	7,089	10,899	602	68	11,915	91.5
합 계	68	8,850	2,404	22,317	33,571	3,879	208	38,923	86.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처럼 연차가 오래된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이 주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며, 신규 장비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할 경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⁶⁾에 따르면라도 동 사업은 운영기관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제공할 유인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고, 예산규모에 맞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기간 연장 시 평가하는 평가 방법 또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훈련센터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설 및 장비 구축 계획’, ‘훈련 과정 설계 및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훈련센터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배점 없이 심사위원의 총괄적인 의견서에 따라 연장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훈련센터의 신규 지정에 대한 심사·평가보다 연장심사에 대한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더 많이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를 보면 ‘훈련실적 달성률’, ‘수료율’, ‘협약기업 참여율’ 등에 대한 정량평가가 70점인데 반해,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 설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 등에 대한 정성평가는 30점에 불과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료율 등의 양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6)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1197~1198

[공동훈련센터 신규 지정에 대한 평가기준]

영역	항목		지표	배점	심사목적(문항)
계				100	
사업 역량 (30)	사업 필요성 (적부)		사업목적의 타당성	-	기관의 적정성,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수행 의지, 신청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중복성	-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기존 공동 훈련센터와의 중복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	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관 역량 (30)	훈련 (15)	훈련 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8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실적, 유사한 타 훈련과의 차별성
			훈련 운영	7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실시 경험(실적)
		훈련 인프라 (15)	재정 건전성	5	재정의 건전성(주.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확인)
훈련 시설 및 장비	10		시설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시설 기준), 장비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장비 기준)		
사업 투입 (30)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8)		협약기업 확보 계획	5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신규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협약기업 지원 계획	3	협약기업 훈련참여율 및 유지율,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사업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15)		전담 조직 구축 계획	9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6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전담자 1인당 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인프라 구축 및 활용(7)		시설 및 장비 구축 및 관리계획	7	시설의 적정성, 장비의 적정성,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사업 운영 (40)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40)		훈련 목표	5	당해 연도 최소훈련목표(연인원)
			수요조사 계획	10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 수립의 적정성
			과정설계 및 개발 계획	10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교·강사 확보 계획
			과정운영 계획	10	자체 훈련 운영관리 체계의 적정성, 연간 훈 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과정평가 계획	5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연장심사**에 대한 평가기준]

영역	항목	지표	심사문항(목적)
사업 투입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	협약기업 확보 계획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신규 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비협력업체(비회원사) 확대를 위한 계획(노력)
		협약기업 지원 계획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사업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전담 조직 구축 계획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채용계획, 신분 등)
		전담인력 역량강화 계획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전담자 1인당 교육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시설·장비 구축 및 효율성 확보	시설의 적정성(증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장비의 적정성(증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파트너 훈련기관 활용계획	파트너훈련기관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업 운영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	훈련 목표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연인원)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수료율 등)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협약기업 참여율, 훈련참여 율, 유지율)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 - 채용예정자 훈련(연인원, 취업률, 고용유지율)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수요조사 계획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훈련과정,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과정설계 및 개발 계획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교·강사 확보 계획
		과정운영 계획	자체 훈련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연간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과정평가 계획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상기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이 총괄평가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기준]

구분		평가 내용 및 방법
①	정량 평가 (70점)	■ 평가항목: 목표대비 훈련실적 달성률, 수료율, 협약기업 참여율,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취업률, 고용유지율), 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훈련시설 및 장비 활용률 등 ■ 평가방법: HRD-Net 훈련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표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②	정성 평가 (30점)	■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설계, 과정운영, 과정평가 활용,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 등 ■ 평가방법: 공동훈련센터별 성과평가 보고서(평가자료),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사 ※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
③	가점	■ 훈련실적 기여도(3점), Best of CHAMP Day 입상(2점), 정부정책 부합도(2점)
④	감점	■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⁷⁾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은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규 훈련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보조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장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0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공사 지연 일정을 감안한 공사비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경기남부 지역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084억 5,800만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²⁾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관련 예산으로 2022년 예산(150억 2,200만원) 대비 13억 8,300만원 증액된 16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201	70,597	70,597	81,906	11,309	16.0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1,602	15,022	15,022	16,405	1,383	9.2

자료: 고용노동부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8년 ~ 2024년 (당초 2018년 ~ 2022년)
총사업비	1,085억원(국비) (공사비 539억원, 시설부대경비 62억원, 용지보상비 483억원)
사업규모	22,386m ² (지하 1층 ~ 지상 4층)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61-301

2) 고용노동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분석의견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2021년 및 2022년 공사비가 일정부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사업은 2018년에 착수하여 2022년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설계 절차 지연 및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2024년 완공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제 추진 현황]

구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상황	비고
부지매입	2018	2018.12.28. ~ 2020.2.28.	토지 무상대부 여부 검토 후 부지 매매계약 추진
기본 및 실시 설계	2019.12.16. ~ 2020.10.10.	2019.12.16. ~ 2021.9.17.	· 계약기간 1차 연장(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 (변경 전) 2019.12.16.~2020.10.10. (변경 후) 2019.12.16.~2021.6.16. · 계약기간 2차 연장(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 (변경 전) 2019.12.16.~2021.6.16. (변경 후) 2019.12.16.~2021.9.17.
건축공사	2020년 하반기 ~ 2022년	2022.3 (공사착공)	2021.12.28.(공사계약체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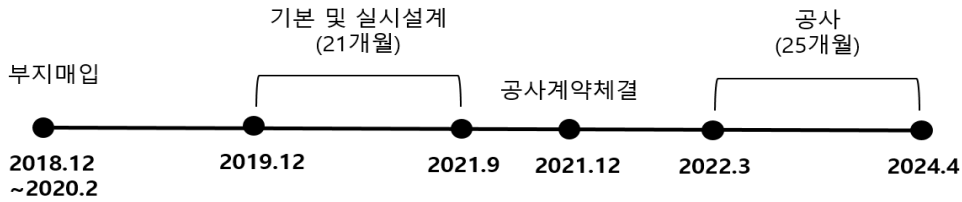
[변경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연도별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공사비	-	-	-	14,430	13,704	15,759	10,012	53,905
시설부대경비	-	2,241	1,231	394	1,318	646	374	6,204
용지보상비	1,000	14,714	32,635	-	-	-	-	48,349
합계	1,000	16,955	33,866	14,824	15,022	16,405	10,386	108,458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추진 경과 및 예산 편성 경과]



예산 편성 경과

- 2021년 예산(14,824백만원) : 공사비 14,430백만원, 시설부대경비 394백만원
- 2022년 예산(15,022백만원) : 공사비 13,704백만원, 시설부대경비 1,318백만원
- 2023년 예산안(16,405백만원) : 15,759백만원, 시설부대경비 646백만원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안은 공사비 157억 5,900만원과 시설부대경비 6억 4,600만원을 합한 16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12월 말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도 공사비(144억 4,300만원)는 전액 2022년도로 이월되었다.

2022년도 또한 전년도 이월 공사비와 당해년도 공사비를 합한 281억 3,400만원 중 8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5%, 공정률은 11.4%에 불과한 상황으로,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중 일정부분은 2023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공사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8		
	예산현액(A)	결산(B)	실집행률(B/A)	예산현액(A)	결산(B)	실집행률(B/A)
공사비	14,430	0	0	28,134	2,114	7.5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계획안을 당초 계획한 연도별 사업비 규모에 따른 16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편성될 경우 해당 예산 또한 일부는 2024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³⁾

3) 이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3년도 예산 일부는 2024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3년 말까지 공사 공정률을 90% 정도로 진행할 전망이고, 시공사들의 2023년까지의 공사비 지급신청액(403억 4,500만원)을 고려할 때 2023년 계획안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에 따르면 계속사업 공사비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하되, 잔여사업비·집행실적·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은 2023년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6~257

가. 현 황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¹⁾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최대 월 5만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²⁾ 수행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26억 1,000만원) 대비 43억 3,800만원 증액된 69억 4,800만원(166.2%)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065	2,610	2,610	6,948	4,338	166.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은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② 공단 접수 및 결정 통보 ③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우리카드) ④ 교통카드 사용 ⑤ 사용내역 확인을 통한 지원금 지급(공단) 절차로 이루어진다.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8

2)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개요(2022년 현행)]

구 분	세부 내역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¹⁾													
지원 내용	최대 월 5만원 범위에서 출·퇴근 비용 실비 지원(버스, 택시, 기차, 주유비 용도 등)													
지원 체계	<table><tr><td>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td><td>⇒</td><td>지원 접수 및 결정 통보 공단 관할 지사</td><td>⇒</td><td>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td><td>⇒</td><td>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카드사 (우리카드)</td><td>⇒</td><td>지원금 지급 공단 관할 지사</td></tr></table>					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접수 및 결정 통보 공단 관할 지사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카드사 (우리카드)	⇒	지원금 지급 공단 관할 지사
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접수 및 결정 통보 공단 관할 지사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카드사 (우리카드)	⇒	지원금 지급 공단 관할 지사						

주1)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으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분석의견

공단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2021년 및 2022년(7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 증액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2023년 예산을 2022년 대비 166.2% 증액하였는데 세부적인 지원 대상의 확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계획안]

구 분	2022(현행)	2023(확대 계획안)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②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에 따라 공단은 지원 인원을 2022년 계획(3,850명) 대비 4배 늘어난 15,440명으로 추산하고, 사업기간은 1년 중 8.6개월에 해당하는 71.76%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5,440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도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인원(신청률 50%)³⁾을 적용하였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2 예산	2023 예산안
○ 지원금: 2,310백만원 - 3,850명×0.05백만원×12개월 =2,310백만원	○ 지원금: 6,648백만원(4,338백만원 중) - 15,440명*×0.05백만원×12개월× 71.76% =6,648백만원 * 15,440명 세부 산출 근거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3,300명 (예산안 추계당시 지원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10,220명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자 중 중증장애인 20,439명 × 신청률 50%) · 차상위계층: 1,920명(18~64세 미만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17,618명 ×중증장애인고용률 21.8%× 신청률 50%)
○ 운영비: 300백만원 - 15백만원×20개 기관=300백만원	○ 운영비: 300백만원(전년 동) - 15백만원×20개 기관=300백만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러나 공단의 동 사업에 대한 지난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사업이 신규 편성된 2021년도 37.8%, 2022년 7월 기준 30.4%로 부진한 상황인데, 이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이 적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실제 카드 사용금액이 적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3) 공단은 이에 대하여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이므로 신청률을 추계하기 어려워 50%로 추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3,065	-	3,065	1,159	37.8	106	1,800
2022.7	2,610	106	2,716	827	30.4	-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대상인원 및 지원인원 현황]

구 분	2021	2022.7
지원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대상인원(A)	6,300여명	9,400여명 ¹⁾
누적 지원인원(B)	1,325명	3,891명
지원비율(B/A)	21.0%	41.4%

주1) 다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2021년 신청인원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여 2022년 예산에는 최저 임금적용제외인가자가 수(9,400여명) 대비 적은 인원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3,850명분 예산 편성) 하였으나, 지원 대상자의 신청지연 및 실제 사용금액이 적어 집행률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단은 이와 같이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을 ① 대상자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출근 제한조치 ②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고용시설에서의 숙식 근로자 또는 통근승합차 등 이용자 ③ 낮은 사업 인지도 및 중증장애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 어려움(지원 신청 지연) 및 카드사용 부진 등으로 밝히고 있다. 동 사업에 대한 월별 지원자 누적현황을 보면 연 초에 지원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이는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 지연 및 카드사용 부진이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별 지원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지원인원(월별 누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	-	-	34	169	638	883	908	1,006	1,215	1,280	1,325
2022.7	129	858	1,999	2,945	3,404	3,711	3,891	3,980	-	-	-	-

주1: 공단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자격(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이 1년에 한번씩 재평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월에 새로 신청을 받고 있음

주2: 2022년 3~4월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카드발급 홍보행사를 함에 따라 지원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런데, 2023년 확대 적용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한 ①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숙식하거나 통근승합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 ② 현재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의 일부는 중위소득 50%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확대적용 되는 대상자와 중복되는 점⁴⁾ ③ 중증장애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신청률을 전체 지원 대상자의 50%로 설정⁵⁾하고, 사업기간을 8.6개월로 하여 2023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증액된 예산을 연도 내 집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인 근로자가 다수 참여하는 재정지원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등에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제휴 카드는 우리카드가 유일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리카드를 발급(인터넷 또는 지점방문)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특성 상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어려워 대부분 은행 지점을 통해 발급받고 있는데, 우리은행 지점이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 멀리 있는 경우 대상자가 지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제휴카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

4) 공단은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5) 2022년 예산의 경우 지원신청률을 지원대상자의 40%(3,850명/9,400명)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7월 기준 집행률은 30.4%에 불과하다.

6) 공단은 이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우체국카드와, 2024년에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기 위해 관련 카드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충전소구축 사업의 예상 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수소충전소구축 사업¹⁾은 수소경제 로드맵,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에 따라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순증된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도로공사로 지정되었다.

[2023년도 수소충전소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소충전소 구축	16,250	-	-	4,500	4,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교통량의 28%를 차지(‘20년 기준)하는 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2019~2021년 동안 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1개소)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비의 70%를 출자 방식으로 지원 예정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1534-30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추진경위	- 친환경차 확산 정책에 따라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간선망인 고속도로에 충전인프라 구축 필요 - 고속도로 교통량의 28%를 차지('20년 기준)하는 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에 대비하여 고속도로에도 대용량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필요
사업기간	(저용량 수소충전소) '19~'21 (대용량 수소충전소) '23~(계속)
사업규모	대용량 수소충전소 연간 1개소 구축
지원비율	수소차충전소 설치비의 70%
시행방법	출자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비(64억원)의 70%를 정부가 출자하고, 공고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30%를 출자하여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개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출자금 교부	국토교통부	구축비 예산 한국도로공사에 출자금 교부
↓		
②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도로공사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③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전국 균등배치를 고려한 최적 대상지 검토·선정
↓		
④ 사업시행 및 준공	민간사업자	충전소사업 착공 및 준공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충전소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대용량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사업의 총 구축비용은 설계 및 감리비 6천만원, 토목/건축공사비 9억 4천만원, 압축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비 54억원 등 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 구축비용 64억원 중 45억원(70%)을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9억원(30%)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출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소충전소 구축비(1개소)	정부지원(70%)
· 설계 및 감리비	60	42
· 토목/건축공사비	940	658
· 압축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5,400	3,780
합계	6,400	4,480(≒4,500)

자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저용량) 구축사업」의 협약서²⁾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부지 제공 및 사업비 일부 지원 역할을 맡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및 구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운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업비 지원은 **협약 체결 후**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1회(70%) 지급하며, 잔금은 수소충전소 준공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의 공사 개시 이후 2023년 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잔금(사업비의 30%)이 집행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아직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협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저용량) 구축사업 협약서 일부]

일자	진행내역
제4조(업무범위)	① “도로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주)OOO”은 “수소충전소”의 설계, 제작, 설치공사, 시운전, 운영 등 제반 업무의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② “(주)OOO”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수소충전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주)OOO”은 위 3항에 따른 합의 조정 없이 “(주)OOO”의 귀책사유로 위 2항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운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당 제6조 1항의 사업비 지원금액의 1,000분의 1을 “도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 지원)	② “도로공사”는 “(주)OOO”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약 체결 후 “(주)OOO”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70%를 제19조 1항의 “(주)OOO”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은 “수소충전소” 준공 후 15일 이내에 동일 계좌에 지급하며, 이에 대해 “(주)OOO”은 “도로공사”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주)OOO”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내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8~2022년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충전소 구축 소요일정을 살펴보았다. 2022년 9월 기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 상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총 8개소이며, 이 중 4개소는 한국도로공사 자체자금으로 구축, 나머지 4개소는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사례(A)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 공모('20.4) 이후 협약체결 시('20.11)까지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사례(A)의 3개소 모두 협약 체결('20.11)로부터 운영개시('22.8)까지 2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협약체결 이후 건축허가 및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기본적으로 9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에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거 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요된 일정으로 미루어보아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예산집행(출자) 완료까지는 1년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비용은 연내 모두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국고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예산으로 진행 중인 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2022년 10월 현재 6개의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각각 설계 및 공사 단계에 있으며 2022년 내 운영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소충전소(저용량) 구축일정 - 한국도로공사]

구분	한국도로공사 구축				민간사업자 구축			
	안성 (부산)	백양사 (천안)	언양 (서울)	성주 (양평)	음성 ¹⁾ (남이)	동해 (삼척)(A)	오수 (완주)(A)	덕유산 (대전)(A)
민간사업자 공모	-				'19.9	'20.4	'20.4	'20.4
협약체결일	'18.08	'18.08	'18.08	'18.08	'19.12	'20.11	'20.11	'20.11
건축허가일	'18.10	'18.12	'18.12	'18.12	'20.07	'21.07	'21.07	'21.07
기본설계 완료일	'18.09	'18.08	'18.09	'18.09	'20.04	'21.06	'21.06	'21.06
실시설계 완료일	'18.10	'18.09	'18.10	'18.12	'20.06	'21.07	'21.07	'21.07
착공일	'18.10	'18.11	'18.11	'18.12	'20.08	'21.11	'21.11	'21.11
준공일	'19.03	'19.05	'19.06	'19.06	'21.03	'22.05	'22.05	'22.05
운영개시일	'19.04	'19.06	'19.06	'19.06	'21.04	'22.08	'22.08	'22.08
한국도로 출자일	-				(8억 지원) '21.05	(10억 지원) '22.07	(15억 지원) '22.07	(15억 지원) '22.07
소요개월수								
민간사업자공고 ~협약체결	-				4	8	8	8
협약체결 ~운영개시	9	11	11	11	17	22	22	22
협약체결 ~건축허가	3	5	5	5	8	9	9	9
협약체결 ~설계	3	2	3	5	7	9	9	9
착공~준공	6	7	8	8	8	7	7	7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부터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³⁾의 실적을 참고하면, 2022년 추진된 수소충전소가 2022년 10월 현재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은 대용량 수소충전소의 통상적인 구축기간은 2년 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요되는 설계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2023년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4034-317

2-1.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공구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토교통부의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¹⁾은 동해선 미연결구간 확충을 통해 동해안권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70억원 증액된 2,828억원이 편성되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²⁾ 및 동법제20조³⁾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철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100% 출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강릉-제진 철도건설	60,000	115,800	115,800	282,822	167,022	144.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강릉에서 제진 간 111.7km의 단선전철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동 사업의 사업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2631-356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으로 한다.

기간은 2021~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2조 7,406억원이다.

[2023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역
총사업비	2,740,646백만원
2022년까지 반영 예산	175,800백만원(6.4%)
사업기간	2021~2027
내용	강릉~제진간 111.7km 단선전철 철도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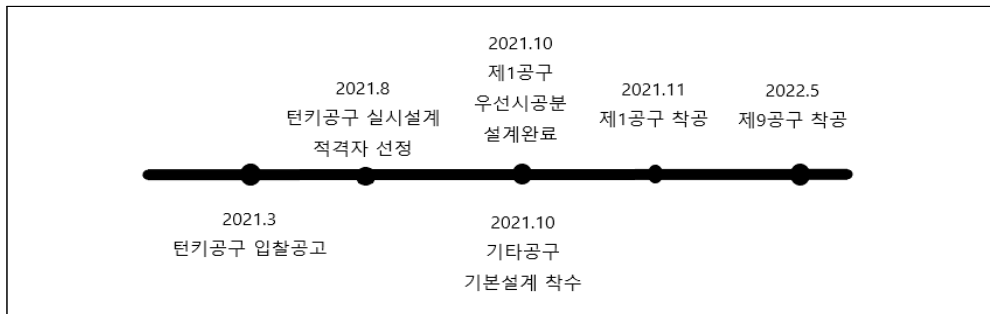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같은 해 사업계획적정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동 사업은 2020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총 9개 공구로 결정되었으며, 각 공구별 입찰방법은 패스트트랙 턴키방식⁴⁾(제1·9공구), 턴키방식(제2·4공구), 일반방식(기타 공구)으로 결정된 바 있다. 턴키방식 가능 공구로 선정된 제1·2·4·9공구는 2021년 8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이외 기타공구는 2021년 10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다. 한편 제1·9공구는 각각 2021년 11월 및 2022년 5월, 공사에 착수하였다.

[2023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경위]

일정	주요 진행현황
'20.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
'20. 5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행
'20. 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12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7호)
'21. 3	턴키공사(T/K) 가능 공구(제1,2,4,9공구) 입찰공고
'21. 8	턴키공사(T/K) 가능 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1.10	제1공구 우선시공분(Fast track) 설계완료
'21.10	기타공구 기본설계 착수
'21.11	제1공구 우선시공구간 착공
'22. 5	제9공구 우선시공분(Fast track) 설계완료 및 우선시공구간 착공

4) 설계·시공 일괄입찰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토교통부의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2022년 9월 기준, 9개 공구 중 7개가 설계 진행 중이며, 2022년 예산의 이월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2,250억원이 편성된 2023년 예산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2,250억원, 용지비 200억원, 부대비 3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억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
공사비	2,250	노반 T/K공사 계속 및 기타공구 착수 소요
용지비	200	용지매수 계속 소요
부대비	378	설계 및 감리 등 기타부대 소요
합계	2,828	

자료: 국토교통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2021~2022년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600억원 중 219억원이 집행되어 36.5%의 집행률을 보이며, 2022년 9월까지 집행된 2022년 예산은 150억원으로, 2022년 12.9%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은 우선시공비 10억원, 설계비 59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2020.12 고시) 상 2021~2022년 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은 2021년 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고 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 턴키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의 기본설계가 2021년 10월에 착수됨에 따라 계획 대비 설계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1년 집행률은 36.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2년 예산은 우선시공구간 공사비(T/K) 753억원, 설계비(부대비) 211억원, 우선시공구간 용지비 1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2년 9월까지 공사비 66억원(제1·9공구 우선시공분), 설계비 등 부대비 85억원이 집행되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한 공구 당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공사비는 200억원 미만인데, 2022년 9월 현재 공사 중인 공구는 2개(제1, 9공구)이며, 나머지 공구는 설계 중에 있어 2022년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753억원 중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2022.9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강릉-제진철도건설	60,000	21,921	36.5	115,800	15,020	12.9
공사비	1,000	593	59.3	75,300	6,556	8.7
설계비	59,000	21,328	36.1	21,100	8,464	40.1
용지비	0	0	-	19,400	0	0.0

자료: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⁵⁾(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제23조에 따른 [별표 1]⁶⁾에서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함

6)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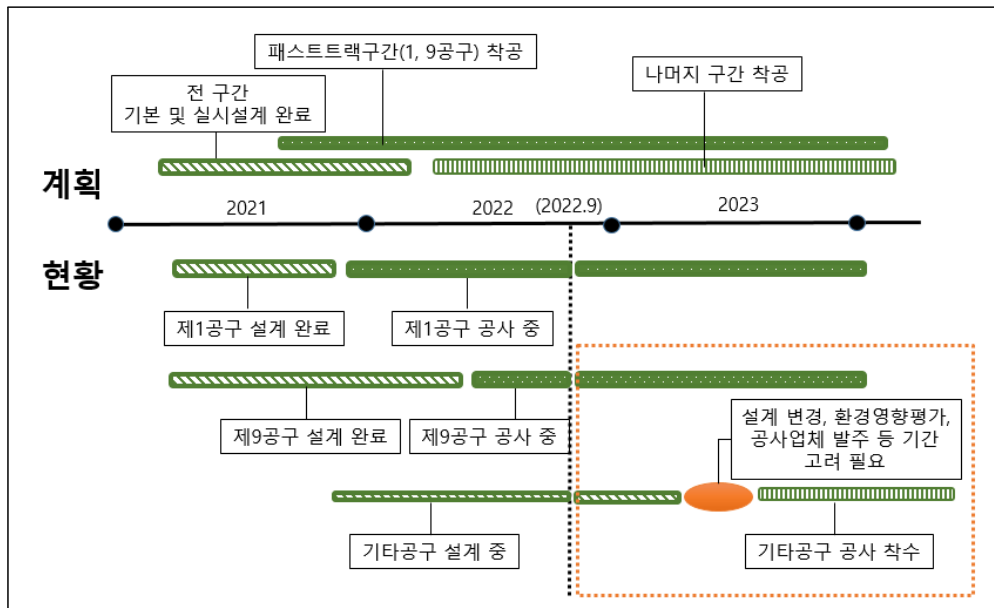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자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

의 건축 공사는 기본설계 9.5개월, 실시설계 8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5개 공구(탄키공구 제외한 나머지)는 17.5개월의 설계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4~5월에 설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⁷⁾의 동 사업 설명자료에서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우선 시공분 제외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공구별 사업실시계획 고시, 공사업체 선정 및 발주절차(탄키공구 제외)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이와 같은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3년 예산안 상 공사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계획 대비 집행현황(그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2020년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⁸⁾된 바 있다. 이후 계획 대비 사업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예산 상

7) [설명]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에 맞춰 진행된 것이며 해당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 2022.1.6., 국토교통부

8)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지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내 설계진행, 환경영향평가 및 공사업체 발주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예산안 상 2,250억원의 공사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동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과, 터키공구를 제외한 5개 공구의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절차의 소요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동법제38조제2항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면제받은 사업(이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6건이며, 2021년 기준으로 6개 중 4개의 사업에서 연례적인 집행률 저조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포항-동해전철화	11,500	11,437	99.5	112,400	71,166	63.3
강릉-제진철도건설	-	-	-	60,000	21,921	36.5
대구산업선철도건설	1,000	0	0	16,400	0	0
석문산단인입철도	3,000	0	0	7,800	0	0
남부내륙철도	1,000	0	0	40,600	0	0
충북선고속화	1,000	0	0	15,400	0	0

자료: 국토교통부

2-2.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토교통부의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¹⁾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 생산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38억원 증액된 1,576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²⁾ 및 동법제 20조³⁾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철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100% 출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16,400	43,800	43,800	157,600	113,800	259.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대구 국가산단부터 서대구 구간까지 36.4km의 단선전철 철도를 신설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 5,510억원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2631-364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역
총사업비	1,551,083백만원
2022년까지 반영 예산	61,200백만원(3.9%)
사업기간	2020~2027
내용	대구국가산단~서대구 36.4km, 단선전철 신설 (역사 9개소, 도시철도 1, 2호선으로 환승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이 된 이후 같은 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2022년 9월 국가철도공단은 동 사업 기본설계를 발주한 상태이다.

[2023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추진경위]

일자	주요 진행현황
'16. 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반영
'16. 6	예비타당성조사 (KDI)
'19.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19. 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KDI)
'19.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1.10~'22.3	설계적정성 재검토
'22. 3	기본계획 고시
'22. 9	기본설계 입찰공고 진행 중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국토교통부의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은 설계완료 및 착공을 계획하여 2023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설계절차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1,200억원, 용지비 23억원, 부대비 3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억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
공사비	1,200	노반 전 공구공사 착수 소요
용지비	23	용지매수 소요
부대비	353	설계 및 감리 등 기타부대 소요
합계	1,576	

자료: 국토교통부

2020~2022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액 10억원 및 2021년 예산액 164억원은 모두 미집행되었으며, 2022년 실집행률도 0.0%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집행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0			2021			2022.9			누적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10	0	0	164	0	0	438	10	2.2	612	10	1.6
부대비	10	0	0	164	0	0	339	10	2.9	513	10	1.9
용지비	0	0	0	0	0	0	99	0	0.0	99	0	0.0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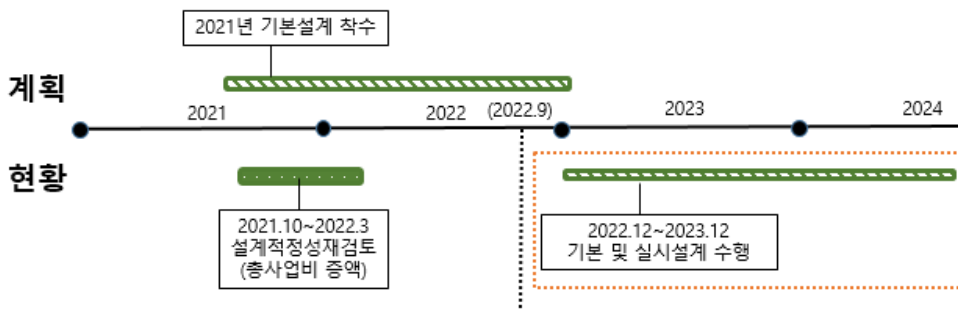
동 사업은 2021년 기본설계 착수를 계획하였는데,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중 총사업비 증액 필요에 따른 '설계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협의가 추가 소요 (6개월 추가)됨에 따라 2021년부터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2022년 3월 기본 계획 고시 이후, 설계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 9월까지 설계비 및 용지비가 집행 지연되어 왔다.

2022년 9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⁴⁾ 공고가 진행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종합심사평가(2022.11)를 거쳐 2022년 12월~2024년 11월까지 24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4)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에 의거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실시설계 분리발주가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2022년 설계에 착수될 경우 2022년 3억원, 2023년 31.2억원, 2024년 28.6억원의 설계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 사업 관련하여 2020~2022년 예산현액은 612억원으로 2024년까지의 계획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계획 대비 집행현황(그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의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바 있으며, 이후 계획 대비 사업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2020~2021년 간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여 왔다. 또한 2022년 역시 기본설계 착수금을 제외한 예산의

5)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동법제38조제2항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면제받은 사업(이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6건이며, 2021년 기준으로 6개 중 4개의 사업에서 연례적인 집행을 저조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포항-동해전철화	11,500	11,437	99.5	112,400	71,166	63.3
강릉-제진철도건설	-	-	-	60,000	21,921	36.5
대구산업선철도건설	1,000	0	0	16,400	0	0
석문산단인입철도	3,000	0	0	7,800	0	0
남부내륙철도	1,000	0	0	40,600	0	0
충북선고속화	1,000	0	0	15,400	0	0

자료: 국토교통부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내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3년 예산안 상 용지비 및 공사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의 600억원 가량의 미집행 예산이 이월될 예정이며, 2023년 내 착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용지비와 공사비가 1,223억원 포함된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토교통부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¹⁾은 청주공항과 봉양 간 85.6km를 고속화하여 호남권과 강원권 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3억 2,300만원 감액된 8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²⁾ 및 동법제20조³⁾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철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100% 출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충북선고속화	15,400	28,000	28,000	8,677	△19,323	△69.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 2,806억원이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2631-356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충북선 고속화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역
총사업비	1,280,687백만원
2022년까지 반영 예산	44,400백만원(3.4%)
사업기간	2020~2027
내용	충북선 청주공항~봉양간 85.6km 고속화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같은 해 타당성조사⁴⁾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1월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재검토 중에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경위]

일자	주요 진행현황
'16. 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반영(국토교통부)
'17. 1~	예비타당성조사(KDI) 착수
'19.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19. 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9. 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2개월, 국토교통부, 동명)
'21. 8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행정안전부)
'21.12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정)
'22.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KDI)

자료: 국토교통부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나. 분석의견

국토교통부의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어 검토일정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사업비 조정 일정, 그리고 2022년 예산이월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설계 및 감리비 등 부대비비용 8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억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
부대비	87	설계 및 감리비 등 기타부대 87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2020~2022년 9월까지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 10억원, 2021년 예산액 154억원, 2022년 280억원 모두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2020년~2022년 예산은 모두 설계비 등 부대비비용으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20~2021년 예산 164억원은 모두 이월되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일정이 2023년 1분기로 계획됨에 따라 2022년 예산 280억원 역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 고속화사업 집행현황(2020~2022.9)]

(단위: 억원, %)

사업명	2020			2021			2022.9			누적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충북선 고속화	10	0	0	154	0	0	280	0	0.0	444	0	0.0

주: 2020~2022년 예산은 모두 부대비비용으로 편성됨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동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중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선형 개량, 충주 달천을 통과하는 특수교량 신설, 봉양역 경유 철도교량 신설로 인해 총사업비 증액(1조 2,806억원→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다. 2022년 1월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재검토 이후 총사업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대상사업 및 분석내용]

법령	대상사업	분석내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타당성 재조사 면제 사업 -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 있으며, 재검토가 완료(2023년 1분기 예상)되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1조 2,806억원→2조원으로 7,194억원 증액)⁵⁾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 발주(공고 및 업체 선정 등 절차 필요) 절차 진행 후 설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2020~2022년 9월까지 동 사업 관련 예산 교부액 444억원 중 집행액은 없으며, 앞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동 예산은 2024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444억원 가량의 미집행 예산이 이월될 예정이며, 2023년 내 설계 착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109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가. 현 황

국토교통연구기획¹⁾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 연구목적, 연구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기획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수행주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²⁾으로, 2021년 결산액은 50억 6,000만원, 2022년 예산은 50억 6,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과 동일한 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교통연구기획	5,060	5,060	5,060	5,060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2022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로 보전받고 있으므로, 통합 기평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의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360-06) 46억 9,500만원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R&D)에 소요되는 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를 전문기관³⁾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이하 “통합 기평비”라 한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4153-301

2)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3)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⁴⁾에 해당하므로, 통합 기평비 제도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별도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세부사업으로 보전받고 있다. 2개의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을 통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2년 206억 4,7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는 198억 1,600만원의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	13,924	13,924	13,144	△780	△5.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교육)	-	6,723	6,723	6,672	△51	△0.8
합계	-	20,647	20,647	19,816	△831	△4.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은 R&D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정책연구비(260-02) 3억 6,500만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360-06) 46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국토교통 R&D의 특성상 연구성과가 공공서비스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적용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은 신규 R&D 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통합 기평비의 5가지 세부 유형(기획비, 평가비, 관리비, 인건비, 간접비) 중 기획비에 해당된다.

올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 평가, 관리 등 업무의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통합 기평비에서의 기획비 편성 유형]

기획유형	내용
중장기전략기획	분야별 로드맵 수립, 사전 기술수준조사, 기술동향조사 등 사업 방향성 확보를 위한 기획
사업기획(예타)	R&D 예타 사업, 신규·후속 세부사업을 기획
사업기획(비예타)	R&D 비예타 사업, 신규·후속 세부사업을 기획
과제기획	해당사업에서 수행하게 될 과제를 기획
사업개선기획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종합계획, 시행계획(연도별)의 수립 및 기획

자료: 정부,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요구에서와 유사하게 예타사업 8개, 그 외 사업 기획 10개, 사전기획, 중장기 로드맵 등을 위하여 50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통합 기평비에서의 기획비 유형 중 예타사업기획, 비예타 사업기획, 과제기획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2022예산	2023요구
예산(안)	5,060백만원	5,060백만원
국토교통 연구기획	예타사업 기획 8개, 소액사업 기획 10개, 조사분석 4개(사전기획, 기술수준조사, 중장기 로드맵 등)를 위한 5,060백만원	예타사업 기획 8개, 소액사업 기획 10개, 조사분석 4개(사전기획, 기술수준조사, 중장기 로드맵 등)를 위한 5,060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통합 기평비 제도의 취지는 그동안 여러 R&D사업의 내역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전문기관과 재원별로 통합하여 편성함으로써, 기획평가관리비의 예산 편성 및 심사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통합 기평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46억 9,500만원의 연구개발 기평비를 이관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통합 기평비)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현 황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사업¹⁾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 선점 및 해외 건설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이하 ‘PIS 펀드’) 조성 사업”은 대규모 자금 소요 및 투자회수의 장기화로 민간에서의 자발적 자금조성이 어려운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성격의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²⁾’)로의 출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2023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50억원 감액된 5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외인프라시장개척	99,406	72,601	72,601	29,852	△42,749	△58.9
글로벌 플랜트·건설·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50,000	20,000	20,000	5,000	△15,000	△7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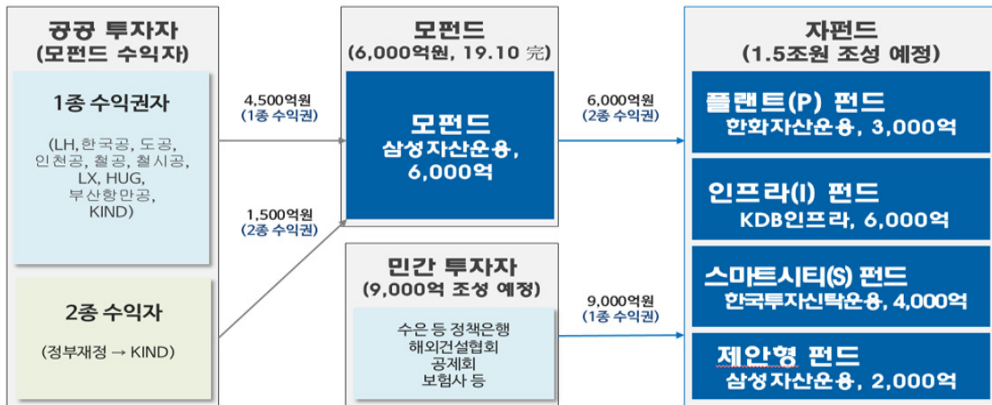
정부는 PIS 펀드에 대하여 정부재정(1,500억원)과 공공기관(4,500억원)의 투자로 6,0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9,000억원의 추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총 1.5조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4310-301

2) KIND(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IS 펀드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주: 정부재정으로 KIND 출자를 통해 모펀드에 투자되는 2종 수익권의 경우, 향후 펀드 청산 시 원금손실 위험을 우선적으로 부담함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3년 예산안은 PIS 펀드의 모태펀드 6,000억원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 출자 약정 금액 1,500억원 중, 2022년 예산까지 출자되고 남은 미출자금액 5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해당 정부 예산은 KIND에 출자되며, KIND는 해당 금액을 모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3년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예산)	2023 (예산안)	2024 (예정)	합계
정부	25,000	50,000	50,000	20,000	5,000	-	150,000
타 공공기관 ¹⁾	35,000	40,000	40,000	190,000	115,000	30,000	450,000
합계	60,000	90,000	90,000	210,000	120,000	30,000	600,000

주: 위의 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10개 기관임

자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플랜트 펀드, 인프라 펀드, 스마트시티 펀드, 제안형 펀드의 총 약정금액 1.1조원의 4개 자펀드가 조성되었다.

[PIS 펀드 자펀드 별 세부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플랜트(P) 펀드	인프라(I) 펀드	스마트시티(S) 펀드	제안형
투자대상 분야		에너지, 발전사업	공항,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도시개발 및 주택 (ICT기술 접목)	수익형 투자
주목적 투자비율		60.0	60.0	60.0	0
약정금액		2,100억원	4,500억원	2,400억원	2,000억원
투자자	공공	모태펀드 ¹⁾	모태펀드 ¹⁾	모태펀드 ¹⁾	모태펀드 ¹⁾
	민간	한국수출입은행, 한화생명, 한화손보,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우리은행, KDB인프라자산 운용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 운용, 한국토지신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우리은행, 삼성자산운용, NH손보, 한화손보, 코리안리재보험

주: 1) 모태펀드 출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10개 기관임

자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나. 분석의견

PIS 펀드는 자펀드 조성 계획 금액 1.5조원 중 미결성 금액이 4,000억원, 자펀드 조성 금액 1.1조원 중 미투자금액이 6,537억원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정부 예산 출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투자 집행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정부 예산 출자를 통해 최초로 추진된 PIS 펀드는 6,000억원의 모태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총 1.5조원의 자펀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에 따라 2022년 8월 말 현재 총 약정금액 1.1조원의 4개 자펀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결성 계획 중 4,000억원의 자펀드 미 결성 금액이 남아 있다. 해당 1.1조원의 4개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약정 금액은 4,924억원이다.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에 따르면, PIS 하위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일로부터 4개월(제안형 펀드는 3개월) 이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내 추가 연장 가능하나, 민간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4개 자펀드 모두 결성이 추가 연장 기간 내에서 결성 완료되었다.

[PIS 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후 펀드 결성까지 소요 기간]

(단위: 억원)

구 분		자펀드 매입 약정 총액		위탁 운용사 선정일	펀드 결성까지 소요 기간		
			(모태 펀드 약정액)		1차 결성시한	2차 결성시한	실제 결성 시기
자펀드 결성 완료	플랜트(P) 펀드	2,100	(900)	2020.1.	2020.5.	2020.8.	2020.9.
	인프라(I) 펀드	4,500	(2,226)				
	스마트시티(S) 펀드	2,400	(1,198)				
	제안형 펀드	2,000	(600)	2019.12	2020.1.	2020.2.	2020.3.
	소 계	11,000	(4,924)	-			
조성 계획 중 자펀드 미결성 금액		4,000	-	-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한, 상기 4개 펀드는 투자가 각각 자펀드 결성시기 이후 4년, 3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 완료 시한까지 50% 정도 기간이 경과한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특히 인프라 펀드와 스마트시티 펀드의 경우 자펀드 출자 약정금액 중 미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미투자율이 각각 70.9%(3,191억원)와 91.5%(2,196억원) 정도로 투자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4개 펀드의 미투자 금액은 1.1조원 중 6,537억원(미투자율 59.4%) 수준이다. 이와 같은 투자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KIND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PIS 펀드 자펀드별 투자기간 및 미투자금액 (2022.8.)]

(단위: 억원, %)

구 분	결성시기	투자기간 (~까지)	존속기간 (~까지)	결성 총액 (a)	투자 집행액 (b)	미투자금액 (c=a-b)	미투자율 (c/a)
플랜트(P) 펀드	2020.9	2024.9	2035.9	2,100	1,057	1,043	49.7
인프라(I) 펀드	2020.9	2024.9	2035.9	4,500	1,309	3,191	70.9
스마트시티(S) 펀드	2020.9	2024.9	2035.9	2,400	204	2,196	91.5
제안형 펀드	2020.3	2023.3	2035.3	2,000	1,893	107	5.3
합계	-	-	-	11,000	4,463	6,537	59.4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PIS 펀드의 자펀드 조성 계획 금액 중 미결성 금액이 4,000억원, 자펀드 조성 금액 1.1조원 중 미투자 금액이 6,537억원 등으로 진행이 부진함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 출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투자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³⁾

3) KIND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미결성 금액 4,000억원 중 투자 사업을 먼저 확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 방식의 하위펀드 조성(2,800억원 규모, 2건)을 검토·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01-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157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